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4 ~ 2028]



법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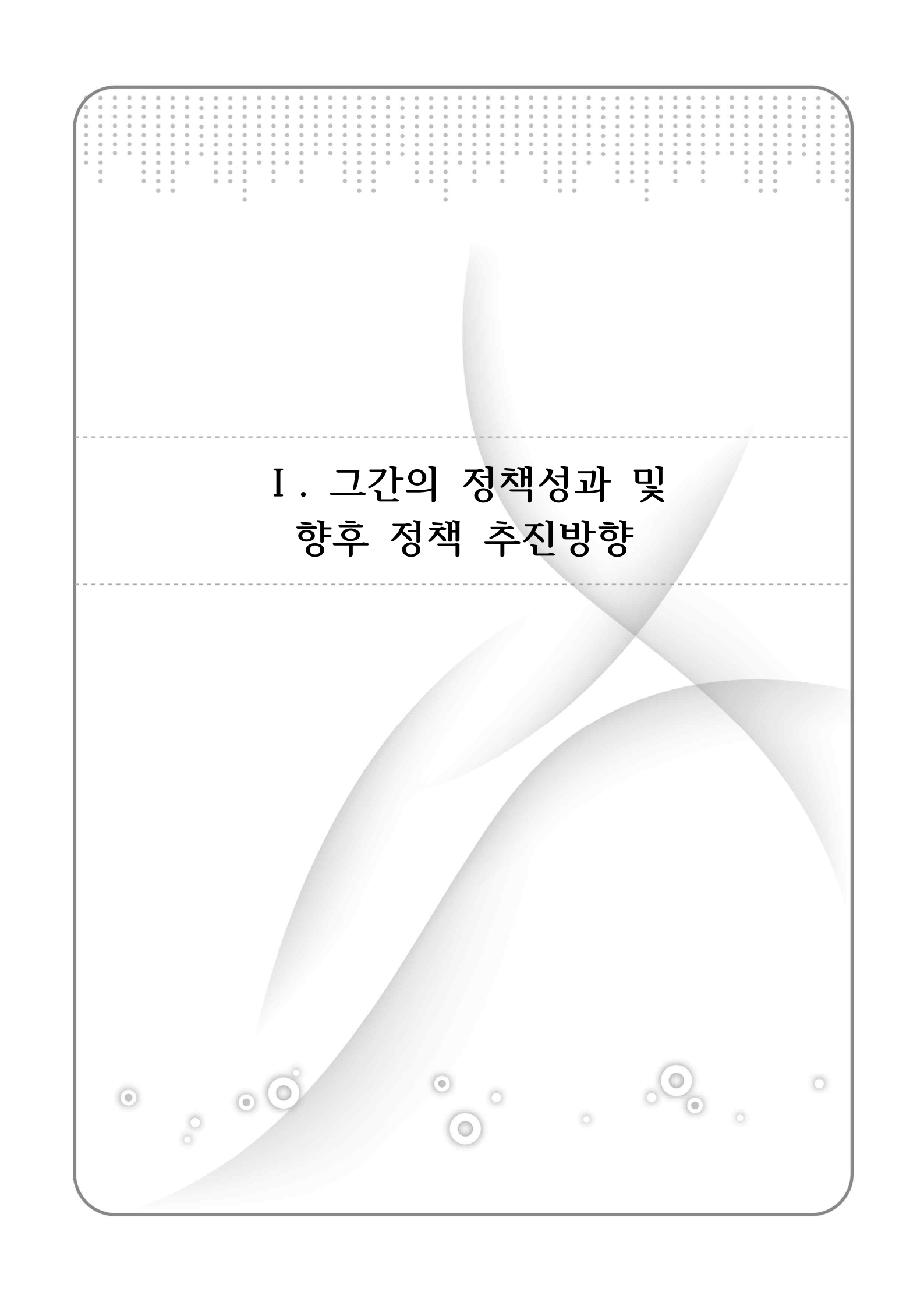


2024년도 법제처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4. 3.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654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5층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21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8
1. 법제처 일반현황	30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33
III. 세부 추진계획	36
1. 전략목표 I	38
2. 전략목표 II	59
3. 전략목표 III	80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입법 총괄

-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수립 (‘22. 8.), 입법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 국정운영 뒷받침
 - 입법추진대책 수립·보고, 입법추진현황 상시 점검·관리 등 선제적 지원 강화로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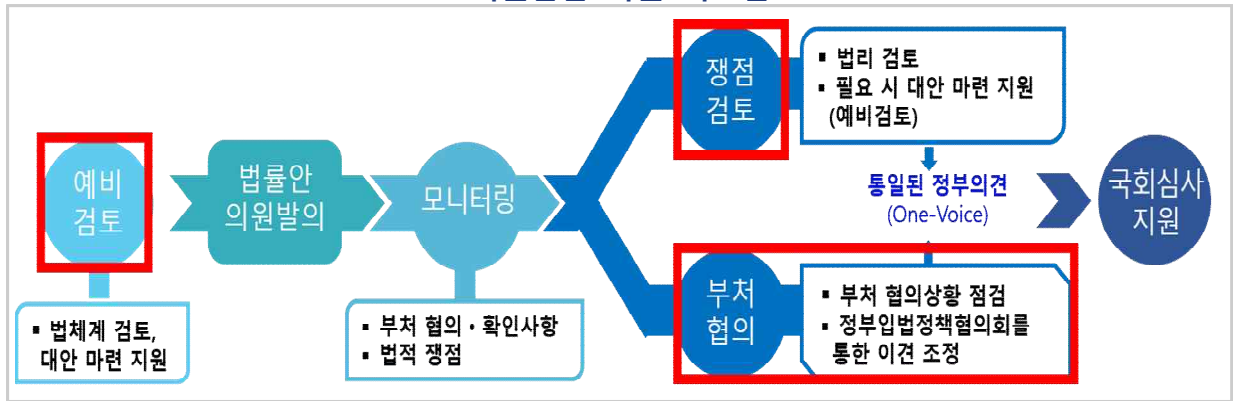
법률	제출완료		제출 예정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	제·개정 예정	
	통과	계류	'24	'25~			'24	'25~
492	246	163	56	27	282	238	30	14

-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하위법령 제때 마련 현황 적극적 관리, 정책의 적시 시행 지원
 - 법률 시행일 120일 전부터 입법진행상황 점검, 지연 시 입법 촉구 및 차관회의 격주 보고(‘23년 25회)
 - * '23년도 하위법령 제때 마련율 100% 달성
-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관리를 통해 정부입법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지원
 - 210건에 대해 연간 정부입법계획 수립(‘23.1.) 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입법 수요를 신속히 추가 반영하여 총 220건 국회 제출
 - 정부입법계획 상 법제처 법안 제출 일정을 준수한 법률안 87건 모두 계획된 일정에 따라 국회 제출, 정부입법 제때 마련율 100% 달성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대응체계 정립

-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을 신속히 국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내 의원입법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의원입법 지원 시스템 ■



-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총 23,563건에 대하여 규제·예산·조직 등 부처협의 필요사항 포함 법률안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합계	규제 신설·강화 관련	국가·지방재정부담 관련	조직 신설 관련	타 부처 업무소관 등 관련
9,381건	1,686건	1,652건	365건	5,678건

- 부처협의 필요사항이 포함된 법률안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의원입법지원시스템)하여 신속하게 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
- * 규제입법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연계하여 공개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협의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19.8월, '21.1월)

- 소관부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관계부처 의견을 조회(10일 이상)하고, 관계부처가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회신(15일 이내)하도록 개선

-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 검토의견서를 소관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여 법안 심의과정 지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검토건수	369건	593건	528건	455건	405건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법제처 주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신속하게 이견 조율

2023년 국정과제 법안 이견조정 사례

* 「도심형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심형항공기)’의 상용화 기반 조성

부처 간 이견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관계 부처인 산업부 간 이견
 ▶ 산업부 소관 도심형항공기 개발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근거 포함 여부

법제처 조정안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견 조정, 통일된 정부의견 국회 전달
 ▶ 관련 지원육성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도심형항공기 개발 관련 업무 추진근거를 포함하되, 부처 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

→ 조정안을 반영한 대안의 국회통과('23. 10. 6.), 시행 예정('24. 4. 25. 등)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 법제처 주도 일괄정비로 신속히 법령정비 추진
- 지자체가 소관 사무를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국가 관여를 최소화하는 등 147개 법령 정비
- * 82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1. 13., 11. 16.) 및 65개 하위법령 공포·시행(11. 16.~17.)

유형 ①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없음에도 법령에서 기준을 정한 경우
 → 법령상 기준을 삭제, 조례로 대폭 위임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체육시설법 시행령 제4조의2)

기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기준(80%)을 법령에 규정

개선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모두 위임

효과

지방사무 운영의 자율성 보장



*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306개

유형 ②

법령상 기준이 일률적이어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제약되는 경우
 → 조례로 법령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유아숲체험원 등록 기준(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

기존

유아숲체험원 법령상 등록 기준(1만 ㎡ 이상, 지도사 2명 이상)을 5/1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개선

법령상 기준의 6/1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효과

지방행정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근거 마련



* (관련 조례)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13개

유형 3

지자체 추진 정책 중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근거 마련 후 조례로 위임

▶ 가로수 조성·관리 비용 체납 시 징수 근거 신설(도시숲법 제12조)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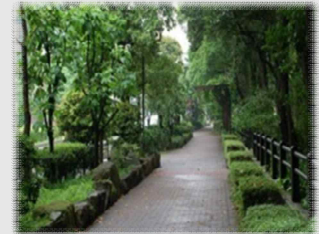
가로수 옮겨심기·제거·가차기 등을 한 자가 관련 비용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부재

개선

체납처분 절차 적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실효성 확보에 기여



유형 4

지자체 추진 정책에 대한 중앙부처 사전 승인·협의 또는 보고

→ 사후 통보·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

▶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해제(수목원정원법 제6조의2)

기존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 전 산림청장의 승인 필요

개선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산림청에 통보

*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등

효과

지방사무에 관한 지방자율성 제고



*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 자치법규 입안·해석 시 법적 쟁점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상담 등을 제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적법한 자치법규 마련 지원,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뒷받침

-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제상담 119 및 법제협력관 파견 등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적인 법제지원 실시

▣ 지방자치단체 대상 자치법규 종합지원 체계 ▣

전문적인 자문의견(문서)	대면 종합상담	유선·온라인 신속상담
자치법규 의견제시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제상담 119 (유선 및 정부입법지원센터 Q&A 상담)
269건	39회	1,124건

법제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현장맞춤형 지원

강원·경북·울산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법제협력관 파견

□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지원 체계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입안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신청주체를 광역의회까지 확장하고, 신청대상에 자치법규 조례뿐 아니라 규칙까지 확대하여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제공

<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공 현황 >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상 지자체 수(개)	60	137	152	171	212
제공 건수(건)	280	449	474	597	709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필요 사항 지자체 통보, 필수위임조례 입법현황 점검·공개 및 위임조례 마련 지원을 위한 입법모델 제공
 - * 조례위임사항 통보건수: '20년 165건 → '21년 272건 → '22년 154건 → '23년 293건
- 입법모델 마련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공청회 및 토론회에 국회, 지방 4대협의체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협력
-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 배포하는 참고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여 자치법규의 적법·타당성 확보
 - * '23년도 기준 행정안전부 등 총 14개 기관에서 검토 요청,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등 총 19건 검토
- 분기별로 주요 입법컨설팅 사례를 선정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매년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선정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 포상

2]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 구축

□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청년 취업 및 사회참여 과정의 불합리한 법령상 장애물을 제거하여 경제활동 촉진 및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
 - 국가자격시험을 미성년자도 응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자격취득 등 요건상 연령 제한을 완화(미성년자→18세 미만)하는 법령정비 추진
 - * 16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5. 18., 11. 16.) 및 2건 통과(12. 8.),
 -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취업난 개선을 위해 법령상 자격·인력 기준의 학력 제한 완화(대학 졸업→전문대학·특성화고 졸업)
 - * 31개 법령(20개 대통령령, 11개 부령) 정비 완료(11. 21. 공포·시행)
-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하는 정비 추진
 - * 75개 법령(대통령령 61개, 부령 14개) 정비 완료(4. 25. 공포·시행)
- 개별법령상 교육지원, 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공포·시행(9. 26.)

□ 법치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규칙 정비

- 법제정보시스템에 발령·등재된 총 5,228건의 행정규칙을 사후 심사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의견 송부 및 정비 촉구
 - 그 중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등 246건 발굴
 - '17년~'23년까지 개선과제 중 '23년에 162건 정비 완료

행정규칙 정비 사례

▶ 「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소방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에 따르면 부패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보안서약서 서식을 두고 있는 다수부처의 행정규칙에서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부패신고,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면책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부처에 통보

- 규제 행정규칙의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이탈 여부를 사전 검토, 행정규칙 발령 전 소관부처·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검토의견 제공
- '23년 총 215건의 규제 행정규칙 중 98건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지원하여 행정규칙의 완결성 제고(대안제시율 45.5%)

규제 사전검토 사례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안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의 인증관련 업무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를 적시하고 있지 않음.



☞ 성능인증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유사한 입법례를 제시하면서 행정처분의 개략적인 종류를 적시하도록 권고함.

□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법제 혁신 추진

- 법적·사회적 기준의 '만 나이' 통일 안착
 - 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을 위한 2단계 정비 추진
 - 신속 정비를 위해 1단계 6개 법률(만 나이로 정비) 및 2개 시행령 개정 완료
 - 사업자부담 완화를 위한 2단계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완료('23. 12. 26.)
 - * 억울한 사업자 면책, 신분증 제시요구 근거 마련, 구매자 협조의무 근거 마련
-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원칙의 정착을 위해
 - 법부처·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
 - * 국민인식조사(10. 30. ~ 11. 12., 총 22,226명 참여) 결과, 일상생활 만 나이 사용 경험(73.9%), 향후 만 나이 사용 의향(88.5%)으로 긍정적 반응

○ 행정법제 혁신 보완·발전

- 처분의 취소·철회에 따른 손실보상 일반기준 마련, 이의신청 제도 개선 등 「행정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23. 12. 21.)
- 개별법에 산재한 5개 공통제도(제재처분 기준,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직접강제, 수수료)를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 행정법 체계의 통일성·간결성 확보
 - *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심의 및 소관 부처 협의를 통해 2단계 법체계 일괄정비안 28건(86개 법률) 마련
- 「행정기본법」 상 과징금 및 수수료 공통규정에 맞추어 134개 하위 법령(시행령 123건, 시행규칙 11건) 일괄정비 완료('23. 12. 12. 공포)

■ 하위법령 정비 내역 ■

과징금	수수료
과징금 납부유예·분할납부 등 「행정기본법」과 중복내용 하위법령에서 삭제	행정규칙에 규정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

- '22년 대비 분석대상 제도를 1건 추가하여 입법영향분석 건수 확대 및 실태조사 기능 강화
 - * 국민안전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3개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추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과제 6건 발굴

■ 2023년 입법영향분석 결과 제도개선 과제 ■

분석대상 제도	개선사항
① 어린이 안전관리	① 법령에 위험성 평가 방식 구체화
	② 사고 대응 체계 및 보상 강화 필요
② 장애인 등록	③ 장애정도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법령에 근거 마련
	④ 장애인 복지 지원 대상 조정 검토
③ 위생용품 관리	⑤ 위생용품 관리를 위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 필요
	⑥ 위생교육 내실화 필요

- '22년 실시한 2건의 입법영향분석 결과에 대해 18개 법령 자율정비 완료

□ 규제혁신을 촉진하는 법제 개선

-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승인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 신설
 - * 기존 규제샌드박스과 유사·동일과제는 관계 행정기관 검토 회신 기간을 단축(30일 → 15일) 하고 규제특례위원회(분기별 개최)가 아닌 전문위원회(상시 개최)에서 신속하게 심의
-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령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 「산업융합 촉진법」 등 규제샌드박스 6법 국회제출(7.12), 1건 통과(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신기술·신산업 성장의 장애요소 제거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확대
 - * 시행령 9건 시행('23. 3. 28.)
 - **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의 네거티브 적용(「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기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로 입주가 허용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열거

개선 사행행위업 등 특정 업종 외에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 현장 및 국민 의견을 통한 법령심사

- 법령안 심사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입법절차 운영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
 - * 국민참여심사 실적: ('21년) 105회 → ('22년) 106회 → ('23년) 108회

국민참여심사 주요 사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의 활동증명 유효기간 연장 확대(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예술인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면서, 연장 대상자를 시행일 기준(23. 6. 30.)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

개선안 코로나19로 활동의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코로나19 기간 중 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에게도 유효기간을 연장 하도록 혜택 확대 ☞ 약 2만4천여 명 추가 혜택 부여

□ 적극적 법령검토지원 및 법령해석을 통한 국민권의 강화

- 중앙부처·지자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정확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여 정책의 적법성·적시성 확보 지원
 - * 2023년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총 512건(중앙 282건, 지자체 230건)의 상담 등을 평균 2.1일 이내 제공
 -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체감도 높은 법령검토지원 제공
 - *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 법령에 대한 현장 상담 및 제도 홍보 수행, 총 18회 개최 90건 상담
-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규제의 확대적용이나 법령의 소극적·차별적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

2023년 주요 적극해석 사례

▶ 국민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해석한 사례(23-0659 안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3호나목에서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를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신고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된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새로운 충전기로 교체하는 행위(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새로운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므로,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제6호나목 신고기준란 2)에 따른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보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

▶ 규제 등 침익요건의 확대 해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적극해석한 사례(23-0160 안건)

- 공동주택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의 계단탑으로서 지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단탑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문언상 바닥면적 제외대상인 계단탑을 옥상에 설치되는 계단탑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계단탑은 일상적인 주거활동 등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기능상 부수적인 부분이므로 이를 바닥면적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축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고 해당 구조물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을 줄여 그 설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 해 바닥면적 제외대상 계단탑에 해당한다고 해석

▶ 수익요건에 대한 축소해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적극해석한 사례(23-0877 안건)

-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단독주택 1개 동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도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석



- 적극적 협의·조정처리를 통한 지자체 현안 해결 및 분쟁 조기 종료
 - 실무 검토 단계에서 협의·조정처리제도를 활성화('20년 116건 ⇨ '23년 169건)해 분쟁의 조기 해결과 국민 편익에 기여

2023년 주요 협의·조정처리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해결한 협의·조정 사례(23-0877 안건)



- (질의요지)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복지시설인 공동목욕탕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목욕장업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소관 부처 신고 불가 VS **영등군** 신고 가능

- (조정내용) 고령자복지주택에 설치된 목욕탕이 ①사용자를 특정하고, ②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고, ③해당 시설의 목적 범위에서 이용료를 받아 별도로 회계 관리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운영 가능 → “목욕장업 신고 불필요”

☞ 지역 민생현안 해결 + 세금 낭비 방지 + 국민 정책 만족도 제고 !!

목욕장업 신고 없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해당 목욕탕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현안 관련 이견 조정

- 2023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44회 개최, 490건 최종 회신

【최근 5년간 안건 회신 현황】

연도	위원회 개최 횟수	회신 건수
2019년	46	452건
2020년	40	454건
2021년	42	470건
2022년	42	470건
2023년	44	490건

③ 법령서비스 혁신 및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 확대

□ 법령데이터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하여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 행정심판례 등 약 510만 건의 법령정보 제공('23년)
- 일상용어와 관련된 법령용어를 매칭할 수 있게 일상용어와 법령정보 간 관계정보를 기술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약 71만 건 구축
 - * ('22) 법률 1,584건에 대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34만건,
 - (23)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3,634건에 대한 법령정보지식베이스 37만건 구축
-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으로 법령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 개발 완료(1차, '23.12.)
 - * '24년에는 학습데이터 수집 및 반복학습으로 지능형 검색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오픈('24.12)
-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 앱에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및 '글씨 크기 확대 기능'을 추가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 10개 행정위원회 결정문을 수집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하고, 기계판독(machine-readable)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법령정보 접근성·활용성 제고

□ 생활법령정보 제공으로 법령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 금융소비자 보호, 유류세 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령을 생활주제별로 종합적으로 수집·제공
 - 법령 해설 외 판례, 해석례, 관련 정책, 민원 서식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법령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활용
 - 어렵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령을 카드뉴스, 백문백답 및 웹툰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취약계층의 법령 검색 편의 및 활용 지원
 - * 일일평균 방문자 수: ('21년) 7.1만명 → ('22년) 10.6만명 → ('23년) 11.3만명

- 재한 외국인, 결혼 이주민 등의 국내 생활 안정과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비자·여권 등 생활법령정보를 12개 외국어*로 번역·제공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니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벵골어, 아랍어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하여 카드뉴스형 외국어 콘텐츠를 10개 언어*로 확대 제공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니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 다문화가족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법령정보 활용 대면 교육 실시(총16회)

□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반영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법 단계별 사전 검토 및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 실시
 - (입법예고) 일반 국민 170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을 통해 입법 예고안 속 어려운 용어 469건 발굴 및 116건 법령 심사 반영
 - (부처협의) 부처협의안을 전수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용어 정비안을 마련하여 법령 심사 시 반영* 추진
- * '18년부터 어려운 용어 3,179개의 정비안 마련, 이 중 2,524개 법령 반영('23년 부처 협의안 1,302건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 492개의 정비안 마련, 이 중 409개 법령 반영)

어려운 용어 사전 차단 주요 사례			
소관부처	법령명	기존 용어	정비 용어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시행령	하이볼륨에어샘플러	고용량 공기 시료 채취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IATA CODE	국제항공운송협회 공항 코드(IATA COD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권취	권취 (호스를 자동으로 감는 장치)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추구(追求) 검사	추적검사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종족부	발 중간부분 (발허리뼈몸통)

- (법령심사)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심사 시 어려운 용어 및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안 제공
- * '15년부터 제정·전부개정 법령안 972건 및 조례안 1,063건 검토('23년 법령안 65건 및 조례안 121건 검토)

- **현행 법령·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및 전문용어 등 집중 정비**
 - 현행 법령을 전수검토하여 어려운 용어 3,525개 발굴, 이를 반영하여 법률 663건, 대통령령 698건 및 부령 678건의 정비안* 마련
 - * '23년까지 법률 176건, 대통령령 698건 및 부령 678건 정비 완료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전수검토하여 어려운 용어 9,111개 발굴, 이를 반영한 행정규칙 4,005건의 정비안을 46개 기관에 송부('20년~'23년)
- **법령 속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를 간결하고 쉽게 고치는 읽기 쉬운 법령문장 만들기 본격 추진('23년~)**
 -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련이 깊은 주요 분야(주택·건축·도로·교통·보건·의료) 311개 법령 대상 6가지 유형의 문장 정비안 533건 마련('23년)

□ **국민 눈높이에 맞춘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 국민 일상에 밀접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에 대해 그림, 절차도, 체계도 등 시각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



-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3년 부동산·국토·조세·노동 분야 32건 법령 대상 440개 시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법령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84.5%) 등 높은 국민 만족도** 달성

* '22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적 검색순위 및 이용자 대상 콘텐츠 수요조사

** '23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1,46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법제교육 수요 확대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교육**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의 법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적·체계적 법제교육 지속 실시
- 교육대상 기관의 수요 등을 고려, 대면·비대면 방식, 강의·실습방식의 다양한 종류의 법제교육 실시

【연도별 법제교육훈련 수료인원 추이】

수료 연인원(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집합교육	21,340	41,221	41,193	39,044
사이버교육	15,737	22,127	22,362	31,429
합계	37,077	63,348	63,555	70,473

* 사이버교육 과목 수가 확대(22개→25개)되고, 비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교육 수료 인원이 크게 증가

【연도별 집합교육훈련 실적 추이】

연 도	교육훈련 실적					
	과정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연간 교육일수	실력향상도/ 업무활용도*	만족도
2020년	53	295	21,340	443	92.6	91.8
2021년	58	669	41,221	863	92.0	91.9
2022년	67	717	41,193	921	91.3	92.9
2023년	63	692	39,044	1,059	91.9	93.0

* 2022년부터는 기존 ‘실력향상도’ 대신 ‘업무활용도’ 지표 사용

- 행정현장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하는 교육과정** 등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법제교육을 위한 법제교육시스템 구축***

* 행정법 과정을 실무종합과정, 집행실무 특강과정, 사례해결 특강과정으로 개편하여 현장 활용능력 제고

**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특별과정, 지방의회의원 법제연수과정 신설

*** 교육과정 안내, 수강신청, 설문조사, 수료증 발급 등 교육운영 쏠 과정을 전산화

□ 국민·기업의 수출·해외진출 증진을 위한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 중소기업 대상 대규모 수요조사를 연2회(2월, 6월) 실시하여 46개 기업이 제출한 37개 국가의 법령 136건에 대한 한글 번역본 제공
-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문체부의 콘텐츠 수출 마케팅 정보 플랫폼(웰콘, welcon.kocca.kr)에 △ 미국 저작권법 등 주요국 콘텐츠 법령 31건 번역본 △ 진출단계별 법규제정보(문체부 작성) 감수 제공
- 공모를 통해 외국어 능력과 법률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가 선정 (총 110명 지원/13명 선정)*

* 해당 언어 능통자로서, ① 해당 언어 국가의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② 해당 언어 관련 법률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모집

- 독일, 미국, 중국, 일본 법령 번역본 14건에 대하여 4개월 간 감수 실시('23.9월)
- '23년 번역 및 전문가 감수 결과를 바탕으로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법령」을 발간하여('23.12월) 번역의 통일성·정확성 제고
- 해외 법령정보 공동 활용 업무협약('23.5월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의 '23년 상반기 해외 법령 번역본 60건 및 법제연구원의 글로벌 현안 연구보고서 17건을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우리 법제정보 제공을 통한 아시아 법제발전 선도

-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등 주요 파트너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방문, 초청연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 법제 네트워크 강화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급증한 외국기관의 법제교류수요에 대응하여 몽골 국립법제연구원('23.1월), 캄보디아 재정경제부('23.4월), 태국 내각사무처('23.5월), 베트남 국가와법연구소('23.10월) 등과 대면교류 실시

- 한미동맹 70주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등을 계기로 고위급 공무국외출장 실시, 법제교류 외연 확대 및 재외국민의 법제 애로사항 해결 소통창구 마련
- 인니 내각사무처 등의 실무·계장급 법제 담당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업무 전반에 대한 법제실무 기본교육 지원(7.16~22, KOICA 협력)
- 아시아 각국 법제 행정 현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공동모색하기 위한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23.10월)
 -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의 법제기관 간 다자교류협력 확대 방안 논의
- 대한민국 법령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국내외 이용자 등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제공
 - 국무조정실,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 KOTRA,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 개최('23.2월, '23.11월)를 통해 법령 번역의 통일성 및 체계성 확보
 - * (절차) ①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② 법령의 외국어 번역계획 수립 및 관련 협의체 운영 → ③ 법령의 외국어 번역 및 감수 → ④ 소관부처 검토 → ⑤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
 - 번역 수요를 바탕으로 수립된 연간 번역 계획에 따라 법령 번역(한국법제연구원 협업) 후 소관 부처 의견조회 및 검토를 통해 번역의 정확도 제고
- 우리나라와의 특별 전략 동반자인 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 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ODA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령정보시스템을 모델로 삼아 KOICA ODA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추진(2023~2028년 103억원)

-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포기 상태였던 사업에 대하여 현지 방문 협의를 통한 담당기관 조정, 양 기관장 간 공한 발송·수신('22.12./'23.1.)을 통해 KOICA-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간 협의의사록(RD) 체결(9.19.) 성과
- 법제처-인니 법무인권부 간 법령정보의 공유, 기술 협업 및 향후 MOU 체결 등에 관한 회의록(MoM) 체결('23.12.5.)
- (베트남) 베트남은 자국의 법제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향상과 법제 행정업무 효율성 도모를 희망, 법제처는 KOICA ODA 사업으로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추진(2025~2027년, 약 32억원)
 - 베트남 법무부 사업참여의향서 제출(7월), '25년 정부부처 제안사업 예비조사 대상 사업 선정(8월), 시스템 구축 현황 및 인프라 환경 확인 등을 위한 베트남 현지조사(10월)
- (해외진출지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대상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추진 등을 통해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에 친숙한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과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대상국	사업내용	사업규모	추진현황
인도 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약 103억원 ('23년~'28년)	○ ('20.11월)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선정 ○ (현재) 협의의사록 체결('23.9월), PC(구축) 사업자 선정 준비
베트남	법제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약 32억원 ('25년~'26년)	○ ('23.8월) '25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예비사업 선정 ○ (현재) 현지조사 완료(~'23.10월)

* 베트남 컨설팅(ISP) 완료 후 구축사업(본사업) 연계 시 약 180억원 사업규모 확대 가능(KOICA)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①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 구현

□ 체계적인 입법 총괄 및 법제지원으로 입법성과 창출

-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총괄·조정하여 입법계획 수립·관리
-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국회 제출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추진상황 점검·관리
- 21대 국회 임기만료 및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환경 변화에 대응한 입법 추진 지원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령안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검토를 제공하여 정책과 입안 과정에의 효율성 제고 유도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 기능 강화

- 국정과제 등 정부가 주요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률안과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법체계, 법리적 쟁점 등 검토
 -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원활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안의 완성도 및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파악·조정 기능 강화
 - 정부 내 조율된 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부처 간 갈등으로 인한 국회 심사 지연 방지
- 의원발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소통·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 '23년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에 따른 국회 제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시행 지원
- 지자체 재정 부담 사업에 대해 국가가 관여하거나, 고시 등 행정 규칙에 의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 발굴·정비

사 례 지방자치단체의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지원 권여(「희귀질환관리법」, 질병관리청)

▶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 치료 의약품 생산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가가 정한 지원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함

- 자치법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품질 높은 자문·상담 등을 제공하여 지자체의 입안·해석 역량 제고
- 입법컨설팅, 위임조례 제때 마련 및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등 다양한 자치법규 입안지원 제도 운영

②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 구축

□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년,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 사업자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여 민생 경제 회복 지원
 - 성별·국적 등에 따른 차별 등 불공정한 법령, 국민 권익 침해 요인이 있는 불합리한 법령 등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정비
-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불편법령 신고센터, 언론 모니터링, 정책수요자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과제 발굴 경로 다각화
- 특히, 정비 대상 규정이 다수 부처의 여러 법령에 걸쳐 있는 경우 국민이 정비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령 개정을 위해 일괄입법 등 입법절차 지원

□ 법제 개선의 국민 체감을 높이는 행정규칙 정비

- 부처에서 입안을 준비 중인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전체 조문의 체계 및 내용을 발령 전에 미리 컨설팅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 지원
- 행정규칙 속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 또는 행정편의적 의무부과 규정 등을 발굴·정비
-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발간·배포, 교육·상담 등 행정규칙 입안·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행정규칙의 적법성·타당성 제고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기업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영 부담 완화 및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추진
- 신기술·신산업의 도입 및 확산 촉진을 위한 법령정비 추진
- 행정분야 자동적 처분의 도입 확산을 위한 입법 기준 마련

□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 법령심사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여심사를 114회로 확대, 관련 예산 확보 추진
- 입법예고, 언론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관심이 높고 현장의견 청취 필요가 있는 법령안을 선정, 국민법제관 또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법령심사 실시

□ 신속·정확한 법령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쟁점이 간단하거나 문언이 명백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법령 소관 부처 의견이 없어도 법령검토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법령검토지원의 신속성 제고

*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은 법령검토지원 접수 후 법제처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도 제고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집행 지원

-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만족도 제고

* 위원회 현장 참석 외에 사전 서면 제출 등으로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법령해석 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의견청취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 등 의견청취 방법도 다양화

-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해석의 지속적 실시를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③ 법령서비스 혁신 및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 확대

□ 법령데이터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국민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는 지능형·생성형 법령검색 시스템 구축
- 법령정보 SNS 공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성 향상 및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에 접근하기 어려운 '법령소외계층'에 대한 법령정보 접근성 개선
-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의 법령해석 및 질의회신과 조세심판원, 특허심판원 등의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제공, 오픈API를 통한 개방으로 법령정보 활용성 제고

□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 사회적 이슈에 관한 모든 법령정보(판례, 질의회신 등)를 한 눈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술형 및 카드뉴스 콘텐츠 제공
 -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중점 개발
 -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수요를 바탕으로 최신 이슈 관련 생활법령정보 신속 제작 및 솔로몬의 재판, 퀴즈 이벤트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국민 관심도 제고
-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제공
 - 생활조례정보를 기존의 법령정보 콘텐츠와 연계하여 함께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확대
-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게 국내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12개 언어로 번역), 국내 법령 이해도 제고 및 다문화사회 기반 강화

□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및 법치주의 확산 기여

- 법령안 사전 검토를 통해 어려운 용어 정비안 마련, 법령 심사 시 선제적 반영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지속 추진
- 국민 일상생활 관련성, 정비 효과성을 고려하여 재산·가족관계 및 경제·금융 분야 주요 법령 속 어려운 문장 정비안 마련
 -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표준 약관·표준 계약서·표준 설명서 속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문장도 정비 추진
-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주요 법령을 대상으로 시각 콘텐츠 개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법령 접근성 제고
 - 기존 콘텐츠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신뢰성 제고

□ 법제교육시설 개원에 대비한 체계적 준비

- 안면도 소재 법제교육시설 개원에 따라 중앙·지방·공공 교육기관 연계형 법제교육과정 등 다양한 장기교육과정 신설·운영
- 전산실습실, 법제교육시스템 등 법제교육시설 운영 기반 시설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공무원 등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법제교육 체계화

- 법적 전문성 향상과 문제해결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 법제교육의 효과 및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사례-실습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과정 운영
 - * 행정법실무 종합과정, 사례로 보는 지방자치법 과정, 교육관계 법령의 이해 과정 등
- 지방의회 의원 법제연수과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과정 등 자치법규 입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 대상 교육 강화
- 중앙·지자체 공무원의 법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령 입안·집행 등에 필수적인 행정법 관련 과정 확대

□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법제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 대상 생활법령교육과 예비법조인 대상 법제실무수습 등 대국민 교육 지속 실시

□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 제공

- 산업별로 소관 부처 등과 협업을 확대하여 소관 부처 등이 기업 수요를 파악하면 그에 맞는 법령정보(법령 번역 등)를 생산·공유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협업 결과물을 게시함으로써 수출 기업이 필요한 각 분야의 필수적인 법령정보를 망라하여 원스톱 제공
-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수요를 중점 파악하여 해외 법령 번역본 제공
- 해외 법령 번역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제·언어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 내부 감수(연구원 상호 간) 후 외부 감수(자문단)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감수 절차 구축·운영

□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 협력 강화

-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내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아시아 법제기관 협의체' 설립 추진
 -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현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24년 하반기)
 - 인도네시아 법제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K-법제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ODA) 지원('23~'24년, KOICA)
- 외국기관 요청 시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을 적시에 제공하고, 번역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 번역본에 대한 감수 추진
-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및 법령정보 인프라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및 법치주의 기반 마련을 통한 글로벌 가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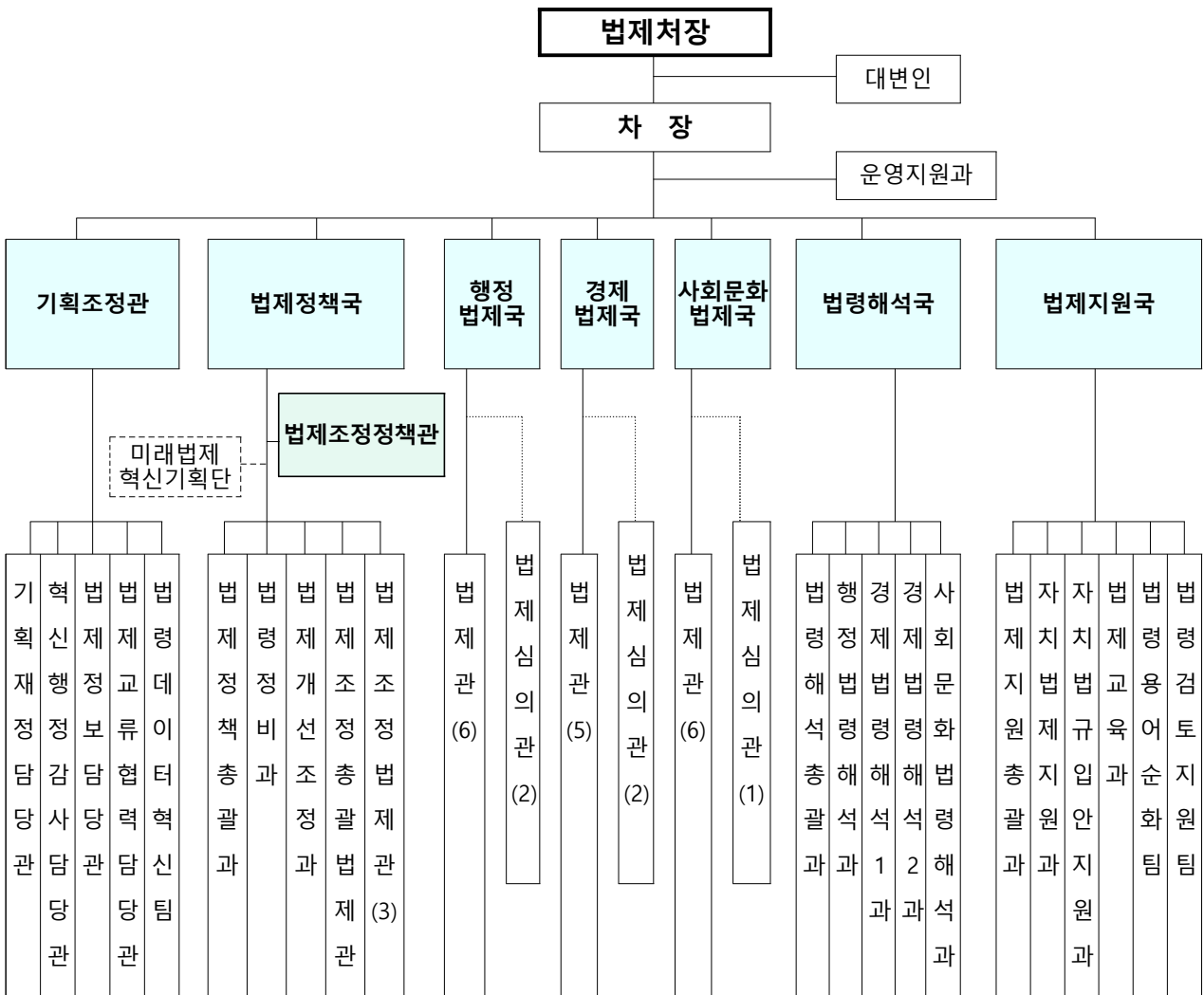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법제처 일반현황

(1) 조직

- 조직 구성: 1조정관 6국 1정책관

(‘24. 3. 기준)



(2) 인원

(‘24. 3. 29. 기준, 단위: 명)

직 급 \ 인 원	정 원	현 원	과 부 족
계	241	227	△14
처 장	1	1	0
차 장	1	1	0
고위공무원	13	13	0
3급 또는 4급	11	11	0
4 급	28	35	7
4급 또는 5급	26	22	△4
행정·전산 5급	102	88	△14
행정·전산 6급	31	30	△1
행정·전산 7급	9	9	0
행정·전산 8급	8	8	0
행정·전산 9급	2	2	0
전문경력관	1	1	0
기록연구관	1	1	0
학예연구사	1	1	0
운전·사무운영	6	4	△2

(3) 재정현황

(’24. 3. 29.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3	’24	’25	’26	’27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총계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217	226	242	259	277
(전년대비증가율, %)		(4.1)	(7.1)	(7.0)	(6.9)
○ 기본경비	42	50	52	53	55
(전년대비증가율, %)		(19.0)	(4.0)	(1.9)	(3.8)
○ 주요사업비	167	178	184	184	184
(전년대비증가율, %)		(6.6)	(3.4)	(-)	(-)
□ 예산					
○ (총)지출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총계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일반회계 】					
○ (총)지출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총계	426	454	478	496	516
(전년대비증가율, %)		(6.6)	(5.3)	(3.8)	(4.0)

* ’23년은 실적, ’24년은 예산, ’25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특성

법제 환경 분석

- (입법 환경)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시급하나, 입법 환경은 불확실
 - '23년 12월 말 국정과제 법안 190여 건 국회 계류 중, '24년 상반기 법안 통과가 필요하나, 총선 정국으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
- (경제 여건) 고물가,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응하여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속 필요
 - 청년 취업률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학 졸업자 등 청년들의 취업 기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
 -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증가 등 무역수지 호전과 더불어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조치 필요
- (지방시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필요
 - 입법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 부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견 제출·반영 창구 확대 필요
-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은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입법적 대비는 미흡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고려, 인공지능 활용 법령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법제 분야에서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필요
 - 미래 대비 법제 연구, 리걸테크 산업 지원,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 정보서비스 제공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입법 조치 수요 증가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임무(Mission)

임무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원활한 법제화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다.

- 법제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법제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입법의 총괄·조정, 법령 심사·해석, 법령정비 등 법제(입법) 분야의 총괄·조정·지원 업무를 수행
 - 위 주요 기능을 포괄하는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원활한 법제화'를 법제처의 임무로 명시
-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법제처의 임무로 설정

□ 비전(Vision)

비전

법제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법령정비 등의 법제업무를 추진하여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 전략목표(Strategy)

- 법제처의 임무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를 설정

전략목표 1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를 구현한다.
전략목표 2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를 구축한다.
전략목표 3	법령서비스를 혁신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을 확대한다.

□ 목표체계

임무

국가 주요정책의 신속·원활한 법제화로 국가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다.

비전

법제로 뒷받침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Ⅲ. 세부추진계획

전략목표 I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를 구현한다.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정부 내 입법 총괄 및 법제지원 업무 강화
 - 국정과제 입법성과 창출과 3대 개혁 등 주요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입법지원 실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정책과 입안의 효율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 기능 강화
 - 국회 입법상황 모니터링, 국정과제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이견 조정[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등 단계별 의원입법 지원 업무 체계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개선 과제를 발굴·정비, 법령 정비에 따른 자치법규 마련 지원
 - 입법컨설팅, 위임조례 제때 마련 및 참고 자치법규안 지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국가 주요정책의 법제화로 국민의 시대를 뒷받침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 총괄, 지원 등이 긴요한 상황
-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법제화를 지원할 필요
- 국정과제 등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적법·타당한 자치법규의 제때 마련을 통한 통일적 법체계 구축 필요

전략목표 1

국정성과 창출을 이끄는 법제를 구현한다.

(1) 주요내용

□ 정부 내 입법 총괄 및 법제지원 업무 강화

- 법령안의 입안 단계부터 국회 통과 및 시행 단계까지 법령안의 입법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주요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도모
-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지원총괄기관으로서 부처 간 협의 및 이견 조정,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 지원 등 조정·지원 기능 수행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구축

- 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
- 입법컨설팅, 위임조례 제때 마련 및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정부 입법계획 일정 준수율	93.2%	96.5%	88.5%	92.2%	100%	95%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은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의 국회 제출 비율로, 부처 반대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정 미준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월별 법제처 제출 일정과 국회 제출 일정을 준수한 법안 수 / 정부입법계획에 따른 월별 법제처 제출 일정을 준수한 법안 수) × 100	법 제정 책 총괄 과 통계자료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23	'24	'25	'26
I-1. 전략적인 입법 총괄 및 법제지원으로 입법성과를 창출한다.					
- 주요 정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지원 지수	15회	23회	26회	28회	30회
I-2.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한다.					
- 의원입법 지원제도 이용자 만족도	88점	91점	92점	92점	92점
I-3.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한다.					
- 자치법제상담 119 운영 실적	837건	1,124건	890건	890건	890건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21대 국회 임기만료 및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환경 변화
- 의원입법이 국가입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체계적·효율적 대응 필요성 증대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성 증대
-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치법규의 규모·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입법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 기능, 관련 부처와 협의 창구 및 다양한 노하우 보유 • 기획정비, 일괄정비 등 그간 축적된 법령 정비 경험 및 지방자치단체 대상 자치법제 지원 경험 보유 • 정부 내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법령 입안에 관련된 다량의 정보 및 전문 인력 보유 <p style="text-align: center;">Strength(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추진 여부 및 방식·시기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한이 없어 신속한 입법을 직접 추진할 수단 미비·부족 • 내부적 법령 전수조사만으로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과제를 발굴하기 역부족 • 자치입법권 존중을 위해 자치법제지원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의견 반영 필요 <p style="text-align: center;">Weakness(약점)</p>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처의 입법 총괄·조정기능을 통해 이해관계집단 등의 반대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차단가능성 • 지방자율성·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 강화 필요성이 증대 및 자치법제 지원 수요 확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민 요구 증대 및 정부 의지 증대 • 법령 사항의 조례 대폭 위임이 예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지원 수요 확대 예상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대량 발생하여 입법추진 속도 저하 우려 • 법령 제·개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존재하여 이해관계 대립 해소 곤란 • 각 부처가 우회입법을 통해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인 자치입법 역량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제지원 의존 가능성 • 법령상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 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제도적 공백 발생 우려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수요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 지원 절차 필요

□ 갈등요인 분석

- 신속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절차 사이에서 신속성과 완성도 간의 가치충돌 발생
-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정비 의지가 필요하나,
 - 중앙부처 우위의 정책판단 관행, 권한 위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인 자치입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 논란 야기 소지

□ 갈등관리계획

-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필수적 입법절차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관계부처 간 이견 등에 대한 법리 검토 및 대안 제시 등 체계적 입법지원
- 국정과제 법안 등 정부 주요정책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경우 입법현황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맞춤형 법제지원 제공
- 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상시적인 추진 상황 점검·모니터링 등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자치권을 존중하는 순수한 자문·지원 제도 운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국정과제 입법 및 정부입법에 대한 총괄·관리 강화

-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법안의 입법추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입법 추진대책 수립
-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상 법률안 150건의 입법 추진단계별 점검·관리를 통한 체계적 입법 추진 지원
 - 정부입법 현황의 체계적 관리 및 차질 없는 정책 수행을 위해 각 부처의 법제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평가

□ 정책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 정책을 기획하고 법령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고 조문화를 지원하는 등 부처의 법령입안을 지원
-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정책 법령안에 대해 입안부터 공포까지 법제업무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기여

(2) 세부 추진계획

-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 지원
 - 국정과제 입법계획 이행상황 관리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입법계획 수립·관리
 -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법안의 입법단계별로 사전법제심사·이견조정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

- 정기국회에 대비하여 주요정책의 조속한 입법에 필요한 입법추진·처리방안, 지연사유 해소 등 입법추진대책 수립·보고
-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입법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각 부처의 적극적인 입법추진 독려

○ 정부입법계획 반영 법률안 대상 입법단계별 점검·관리

- 입법 추진단계별 정부입법계획 대비 지연 여부 모니터링 실시 및 지연(우려) 법안 관리 철저
 - * 정부입법계획상 국회 제출 목표월 기준 90일 전까지 입법예고 미실시 법률안 및 60일 전까지 법제처 심사의뢰가 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추진 상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연 제출 법률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 독려
- 분기별 법제업무평가 실적 점검을 통해 각 부처의 충실한 법제업무 수행 유도
- 법령입안지원,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한 이견조정 등 입법과정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실시

○ 21대 국회 폐기법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예상되는 법안 중 재추진 법안(국정과제 및 정부제출 법안 등) 선정 후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 수정·보고
- 재추진 법안에 대해 정부입법절차 간소화*, 내용 보완, 쟁점 검토 등으로 신속한 입법 지원

* 입법예고 생략·단축, 규제심사·영향평가 생략·신속 처리, 법제심사 간소화 등

○ 하위법령 제때 마련에 대한 지속관리

- 하위법령 제때마련을 위해 법제처 심사 미접수(시행일 기준 50일 전) 및 입법예고 미실시(시행일 기준 120일 전) 여부를 격주로 차관회의 보고

○ 입법예고 의견수렴 현황 관리

-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입법예고 기간 생략·단축 최소화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 등록된 국민의 입법의견에 대한 답변유무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 각 부처에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 양식을 제공하여 국민 입법의견이 체계적으로 분석·관리되도록 개선

□ 정책과 입안의 효율성을 높이는 법령입안지원

- 정책을 법제화하는 경우 예상되는 법리적 문제, 현행 법령과의 충돌 여부, 조문화 방법 등에 대해 종합 컨설팅 실시
 - 특히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학교수·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법제자문관의 검토의견까지 취합하여 결과 제공
- 해석 결과 도출된 법령정비 의견을 부처가 수용하여 입안 중이거나 입법계획에 있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선제적 입법지원 병행
- 주요정책 시행을 위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입안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전담 지원
 - 법제단계별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중요 정책의 신속하고 완성도 있는 시행에 기여

[원스톱 법제지원 업무 흐름도]



- 부처 법령입안 담당자 대상 법령입안지원간담회 연 2회(6월, 12월) 개최 및 법령입안지원 이용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분기별로 조사·활용
- 『법령입안·심사기준』 발간·배포, 교육·상담의 지속 실시를 통해 입안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2024년은 21대 국회 임기만료 및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환경의 변화 예상
 - 입법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부입법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견인 필요
-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에 초석이 되는 입법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입안지원,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사전 심사, 원스톱 법제지원 등 법제처의 다양한 입법 지원 제도 <p style="text-align: center;">Strength(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추진 여부 및 방식·시기 등에 관한 직접적인 결정권한이 없어 신속한 입법을 직접 추진할 수단 미비·부족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제처 역할의 현실적 한계 <p style="text-align: center;">Weakness(약점)</p>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한 입법을 위한 입법추진상황 관리 및 입법절차 효율화 필요성 증대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이 대량 발생하여 입법추진 속도 저하 우려 • 정부입법절차의 상대적 복잡성으로 인해 입안 부처의 의원입법 선호 경향 증대

□ 갈등요인

-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여·야 대립이 심화되고 복잡다기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중요 법안 일수록 국회통과가 어려운 상황
-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속한 입법추진에 장애 발생 우려
- 법령입안 경험·기술 부족으로 인한 부처 담당자의 입안부담 등으로 입안과정에서의 효율성 저해 우려

□ 갈등관리계획

- 국회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 등의 입법현황 점검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범정부적 대응 지원
 - 국무조정실 및 주요과제 총괄 부처와 협업, 중요 법안 등에 대한 입법실적 점검 및 범정부 협의체 보고
- 법령소관 부처에 법리적 쟁점 검토·조문화 등 입법지원을 제공하여 부처의 입안부담 경감 및 입안 과정의 효율성 제고 유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부처협의 및 이견조정 총괄

- (완성도 높은 법률안) 국정과제 등 정부가 의원발의로 추진하는 법률안은 입안단계부터 법리적 쟁점 사전 검토·지원, 법안의 완성도 제고
 - 의원발의된 법률안은 법체계 타당성,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 검토, 통일된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국회 제공, 국회의 원활한 법안 심사에 기여
- (이견 조정) 정부가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개정하려는 법률안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활용하여 통일된 정부의견(One-Voice) 마련
 - *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처 주재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 정부 입장을 조율하여 국회에 전달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조회 및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부처협의 절차 관리
- (국회 협력) 국회 상임위와 법제처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 상임위 간담회 등 국회와 정부 간 지속적 소통·협력체계 구축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의견의 창구 기능 강화
- (법안 모니터링) 국회의안정보와 연계된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일일모니터링 실시, 관계부처 협의 필요 법안 및 법리적 보완 필요 법안 등 발굴
 - 국정과제법안 등 정부 주요정책과제의 입법 추진현황 중점 관리

(2) 세부 추진계획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법제지원 확대

○ 선제적·체계적 법제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 각 부처가 의원발의로 추진 예정인 주요 법률안과 관련된 입법 수요 조기 파악 및 맞춤형 입법지원 실시
- 금년에는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의 재발의를 위한 입법지원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국회 개원 전후 이를 고려한 수요 재조사 및 수정계획 마련

○ 발의 전 법률안에 대한 예비검토 지원

- 의원발의로 추진 예정인 국정과제, 긴급 현안 관련 법률안 등에 대해 정책 조문화, 법체계 검토, 대안 제시 등을 통해 법률안의 완성도 제고 및 원활한 정책 집행 뒷받침
- 입안단계에서부터 부처와 함께 법률안을 마련하고, 예비검토 지원 후 진행상황을 관리하여 필요 시 추가 지원 실시

○ 발의된 법률안의 모니터링 및 쟁점 신속 검토

-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현황 모니터링 및 법리적 쟁점의 신속 검토·지원

○ 의원입법 관련 국회 및 부처와의 협력 체계 구축·강화

- 국회 상임위와 정기적 간담회, 각 부처 방문·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 홍보 및 협력 방안 논의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이견조정·대응 기능 강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의원입법 발의 즉시 관계부처 지정 및 부처 간 협의·확인사항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전달, 소관·관계부처 간 신속한 협의 지원
-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발의 상황 분석 및 대응방안 검토·보고

○ 의원발의 법률안 관련 부처협의제도의 체계적 운영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이견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상황 파악, 소관 부처와 관계부처 간 이견 및 협의 추진 여부 확인 및 관리 등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시 환류하여 부처협의 절차 활성화 도모

○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운영 효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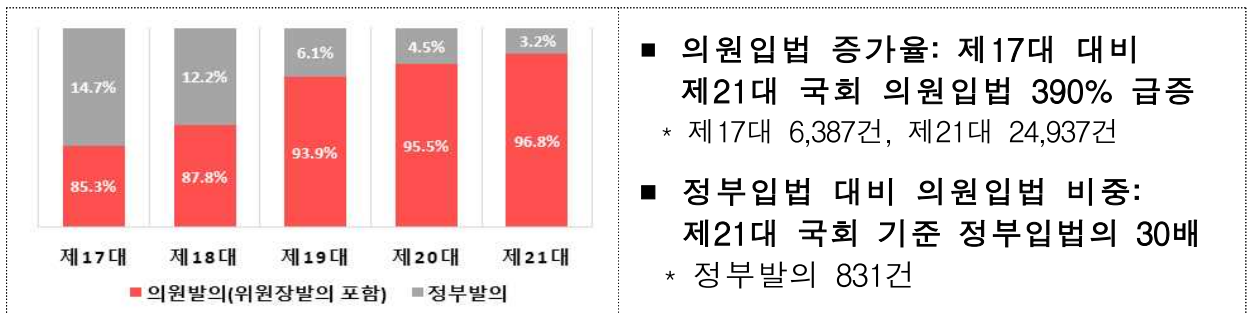
-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국정과제 등 중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이견 조정 추진
 - * 국정과제 법안 등 중요 법안의 경우, 이견으로 인해 지연되는 상황이 식별되면 관계 부처 요청이 없더라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직권 상정하여 이견 조정 기능 강화
- 안건별 난이도, 중요도 등 특성에 따라 협의회 방식(서면·대면) 및 절차(실무협의회, 본협의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실무자로 구성·운영되는 실무협의회 개최
 - 책임감 있는 결정이 필요하거나 보다 신중히 부처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협의회 개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법제사무의 총괄 기관으로서 오랜 법제심사 경험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창구 및 노하우 보유 •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재발의 법률안의 신속한 검토를 위한 사전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입법 특성상 각 부처의 정부발 의원발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권한과 수단에 한계 존재 • 국회의 법률안 심의 과정에는 정부 노력 외에도 정치적 상황, 여론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예측 곤란
<p style="text-align: center;">Strength(강점)</p>	<p style="text-align: center;">Weakness(약점)</p>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발의 법률안 비중 급증으로, 정부 내 의원입법 관련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 필요성 증대 • 제22대 국회에서 여당이 안정적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과제 법안 등의 추진 동력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안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처 간 이견 해소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리적 쟁점 외에 입법정책적 갈등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 등 기관의 협조를 통한 이견 조정 필요 •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과정에의 법제처 개입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최근 5년간 정부 발의 법률안은 감소 추세인 반면, 의원발의 법안의 발의·통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국회 입법과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원입법의 정부 내 총괄·조정에 대한 법제처의 적극적 역할 확보 필요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 증가에 따라 정부 내 의원 입법 총괄 기능의 중요성 증가

구분	20대						21대				
	합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A) * 위원장 대안 제외	21,594	4,258	5,494	5,891	5,706	245	13,369	6,463	6,355	4,503	5,984
관계부처 의견 제출 건수(B)	1,708	257	345	459	620	27	4,204	1,078	1,145	871	1,061
관계부처 의견 제출 비율(B/A)	7.9%	6.0%	6.3%	7.8%	10.9%	11.0%	17.8%	16.7%	18.0%	19.4%	17.7%

□ 갈등요인

- 주요 정책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법안 심사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
- 상임위와 소관부처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부처의 이견이 충분히 검토·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

□ 갈등관리계획

- 변화하는 입법환경에 따라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개선 추진을 추진하고,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활성화
-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 내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검토의견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직접 전달
- 법무담당관회의, 법제교육 등을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이견 조정의 필요성 및 중요성 공유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 역량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보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체계 정비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
 -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
-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입안·해석 등과 관련한 법리적 쟁점들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상담을 제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역량 제고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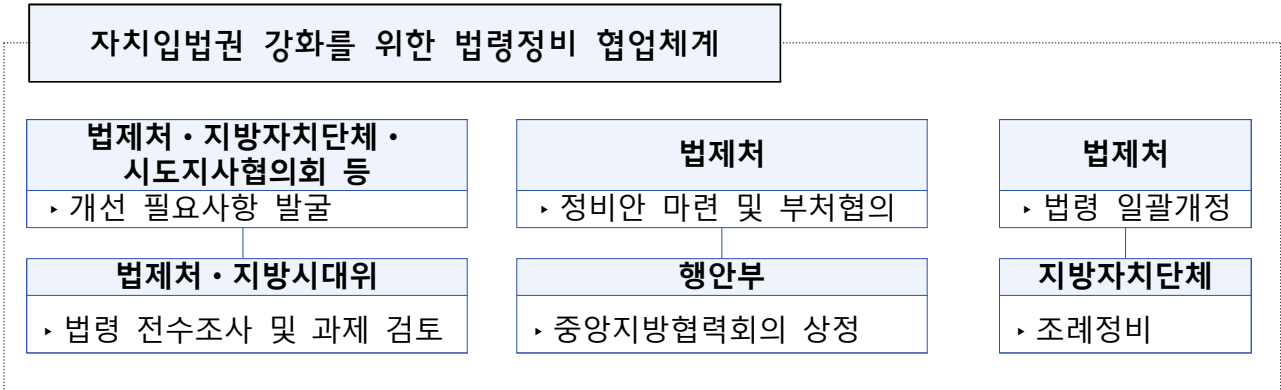
□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 자치법규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검토 의견과 구체적 수정안을 제시하는 입법컨설팅 제공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인 필수위임조례**의 적법·타당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위임조례안 사전검토 실시
 -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임사무 등의 수행에 대한 평가로 법제처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지표 담당
 - ** 법령에서 조례로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마련해야 하는 조례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을 요청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자문의견 제공

(2) 세부 추진계획

□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자치법제역량 강화

- (자치입법권 강화 법령 정비) 법제처·지방시대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협업을 통해 법령정비 사업 추진



- 지방재정사업의 자율성을 국가 법령으로 제한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정규칙 등 정비과제 발굴·정비

유형 1 예시 - 각종 시설·센터 등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기준 등(「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시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등을 법령에서 규정
-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확대

유형 2 예시 - 지방보조금

▶ 희귀질환 의약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희귀질환관리법」 제18조)

- 현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의약품 생산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범위 및 절차 등에 따르면 규정
-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확대

유형 3 예시 - 포상금

▶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금액·지급절차 등(「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환경범죄신고포상금을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 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필요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 포상금 금액 지급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 확대

유형 4 예시 - 행정규칙

▶ 지방자치단체별 택시 감차계획의 중앙부처 보고의무 규정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 제3조, 국토교통부고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사업구역별 택시 감차계획을 확정 후 시·도 공보에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개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부 기관으로 보는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관계를 상호 대등하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 '보고'를 '통보'로 전환

- (자치법제 역량 강화 지원) 자치법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품질 높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법규 입안·해석 등에 관한 역량 제고를 뒷받침
 - 국정과제 이행 관련 자치법규안,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별 특화 추진 정책 관련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을 우선 지원

□ 자치법규 입안지원 서비스 강화

- 자치법규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서비스 제공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입법컨설팅을 집중 실시
 - * 2023년도 밀착형 입법컨설팅 실시 결과: 기초지자체 120건, 광역지자체 5건
 -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청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관련 자치법규안의 경우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신속한 입법컨설팅 제공
 - * 예)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위임사항의 신속한 통보 및 필수위임조례 사전검토, 입법모델 제공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자치법규 제때 마련 지원
 - 조례·규칙 위임사항이 자치법규에 적법·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예비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검토의견 신속 제공
 - 지방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입법모델이 필요한 위임조례를 미리 파악, 해당 조례안의 입법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제공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문을 요청한 참고 자치법규안에 대해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 제공
 -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전달한 경우 해당 결과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전파 협조 요청
 - 제·개정된 법령에 자치법규 위임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 부처에 참고 자치법규안 마련 여부 확인 및 자문제도 선제적 안내
- 자치법규 입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율적인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입법컨설팅 사례 및 우수조례 선정
 - 분기별로 지방자치단체 법제업무담당자 설문조사 및 지방 4대협의체* 자문을 거쳐 선정한 우수 입법컨설팅 사례를 전 지방자치단체에 전파·공유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2024년 제·개정된 자치법규 중 우수한 자치법규를 선정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제처장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필요성 증대
- 지방분권 및 자치입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치법규의 규모·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자치입법 활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 요구 증가
- 법령사항의 조례 대폭 위임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지원 및 위임조례의 제때 마련 중요성 증대

○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수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정비, 일괄정비 등 그간 축적된 법령 정비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정비 추진 가능 • 정부 내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법령 입안·해석 등 법제분야에 관한 전문성 보유 •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해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지방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비과제 발굴·검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전수조사만으로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비과제를 발굴하기 역부족 • 그간 추진된 자율정비 지원 또는 법령 정비 사업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보에 한계 • 조례 제·개정 내용 및 위임조례 판단 여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의견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미흡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시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의견 반영 수단 필요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민 요구 증대 및 정부 의지 증대 • 지방자율성·자치입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및 자치법제 지원 수요 확대 • 자치입법 활동 증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의 증가로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지속 증가 • 법령 사항의 조례 대폭 위임이 예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입안 지원 수요 확대 예상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권한을 조례로 대폭 위임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 정책적·제도적 공백 발생 우려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항인 자치입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 우려 가능성 •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법령상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 자치법규 입안 지원 수요 급증에 대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갈등요인

-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령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정비 의지가 필요

- 그러나 중앙부처 우위의 정책판단 관행, 권한 위임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소관부처의 소극적인 대응 우려
- 중앙 부처가 자치입법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침해 논란 야기 소지

□ 갈등관리계획

- 지방시대위원회·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하여 법령정비 과제 발굴 및 일괄정비 추진, 상시적인 추진상황 점검·모니터링 등 실시
- 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자치권을 존중하는 순수한 자문·지원 제도를 운영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기본방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청년,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 사업자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활력 제고와 포용 사회 구현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정비하고, 규제 행정규칙의 법리적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하여, 행정규칙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기업 활동 지원
-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기술발전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인공지능기술 활용 기반 강화, 신기술·신산업 도입 및 확산이 촉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령정비 실시
- 법령안 심사 과정에 현장경험과 지식을 갖춘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입법의 민주성 및 신뢰성 제고
- 법령검토지원 요건 완화,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이나 현장 고충의 신속한 해결 지원
- 법령해석을 요청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법령해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석 기회 확대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며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삶을 보듬는 법령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국민 이익 증진을 위한 법제적 기반 마련
- 행정규칙은 정책집행의 최종규범으로서 국민 일상생활을 세밀히 규율하므로,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 가능
- 4차 산업혁명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 및 법령정비가 필요
- 국민참여심사를 활성화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법령 서비스 제공
- 법령해석을 요청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법령해석 절차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국민편의 제고

(1)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 청년,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 사업자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
 - 불공정·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활력 제고와 포용 사회 구현
- 위법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발굴·정비하고, 규제 행정 규칙의 법리적 문제점 등을 사전검토하여, 국민의 권익 침해 예방

□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 적극 발굴·개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기업 활동 지원
- 인공지능기술 활용 기반 마련, 신기술·신산업의 안착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인 법령정비 실시
- 데이터 공유 활성화, 종이 없는 행정을 통하여 행정 관련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지원

□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반영한 법제 개선

- 법령안 심사과정에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입법의 민주성 및 신뢰성 제고
- 법령검토지원 요건 완화,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고충의 신속한 해결 지원

-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 시 적극적인 소통 추진
 - 법령해석 요청 내용을 법적 검토가 가능한 질의로 재구성해 국민의 법령해석서비스 이용 편의 증대('23년 민원인 요청 210건의 질의요지 보완)
- 국민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 국민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24년 50건 목표)
- 적극해석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 지원
 -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 해석('24년 56건 목표)을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21	'22	'23	'28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건수	233건	264건	260건	265건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가 252.3건인 점과 전년도 실적이 260건을 고려해 전년도 실적의 5% 이상 상향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과제 중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에 대하여 소관 부처에 수용 여부를 협의 요청한 건수	법령정비과 통계자료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23	'24	'25	'26
II-1.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건수	264건	260건	265건	265건	265건
- 행정규칙 개선과제 정비율	85.2%	85.5%	86.2%	86.2%	86.2%
II-2.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제를 개선한다.					
-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과제 발굴 건수	-	-	50건	50건	50건
II-3.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을 반영하여 법제를 개선한다.					
- 국민참여심사 만족도	98.5%	98.2%	96%	96%	96%
- 법령해석 총 처리 건수	626건	659건	665건	675건	685건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소상공인 · 중소기업자 등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의지와 정책적 노력 강조
-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필요성 증대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 각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행정분야에서도 이에 대응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한 법적 ·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욕구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령 입안 과정에 국민이 참여기회는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전문성 · 경험을 활용해 입법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국민참여입법제도 운영 경험 •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법적 전문성 · 경험 보유 및 법령해석 관련 자료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에 비해 법제처의 실무 및 현장 정보 부족, 소관부처 개정 독려 수단 부재 • 신기술 · 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추이의 능동적 확인이 곤란하여 관련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에 애로 • 국민의 높은 참여 욕구에도 불구하고 법제업무의 특성상 국민에게 부여 가능한 역할 및 권한에 한계 존재 • 법령해석 요청의 증가에 비해 내부 인력 등 법령해석 요청 처리능력의 한계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 회복 및 불공정 · 불합리한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핵심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선제적 법령정비에 대한 정부의지 및 기업 · 국민 요구 지속 증대 • 국민의 참여 욕구 및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증대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대로 법령상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해결 추진 시도 증가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각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법제처 간 협의 과정의 어려움 • 소관 부처의 규제혁신 의지의 정도에 따라 법령정비 추진이 부진하게 될 우려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법령에 대한 이해의 차이 •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부족 • 법령 소관 부처의 1차적 법령해석 등에 대한 협조 부족

□ 갈등요인

- 소관부처가 법령정비에 업무 부담 등으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 정비에 비협조적인 경우 발굴과제 확정에 어려움 발생
-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한 법령정비를 위해서는 기술 관련 정보 및 관련 규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 국민들이 법령해석 제도를 권리구제수단 등으로 보는 인식 확대, 관련 법령해석 요청 증가로 모든 법령해석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

□ 갈등관리계획

-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법령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법제업무평가 시 정비실적을 포함하여 소관부처의 적극적 참여 및 정책 입안을 유도
- 연구용역 실시, 일선 산업기술 현장 및 관련 협회, 전문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향 설정
- 국민의 단순민원·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 정리 및 검토 추진

(4) 기타

- 정부입법지원센터(<https://www.lawmaking.go.kr>)
* 법제처 법령해석 신청 및 법령해석례 등 제공

(1) 주요 내용

□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 사업자를 위한 법령 정비를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 지원
 - 불공정·불합리한 법령 정비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생 활력 제고와 포용 사회 구현

□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발굴 및 정비

- 위법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규칙을 발굴·정비, 행정규칙의 적법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 권익 회복에 기여
- 규제 행정규칙의 사전검토를 통해 위법·부당한 규제 신설을 차단하고,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

(2) 세부 추진계획

□ 민생 회복과 불공정·불합리 해소를 위한 법령 정비

-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및 일정 소득기준 미달하는 청년 응시자에 대해 각종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부담 완화^①
 - 경제활동 진입 시기 단축을 위해 자격시험 등에서 영어과목 등을 대체하는 시험의 인정기간을 확대^②하고,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학력요건 완화^③

① 국가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응시 수수료 반환기준 합리화 등

② 자격시험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5년 연장 등

③ 자격 취득 시 요구되는 학력요건을 졸업자에서 졸업예정자로 확대 등

- (소상공인 등 사업자 재도약 지원) 인·허가 및 검사 관련 수수료 등 소상공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금전납부 부담 완화^①
 - 영업자의 실적과 관련한 과도한 취소사유 합리화^②, 휴업·폐업 부담 완화^③를 통해 유연한 경제활동 지원
 - ① 중소기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
 - ② 지정 취소 기준인 실적 미비 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등
 - ③ 신고의무 대상인 휴업기간 합리화, 세법 및 개별법상 폐업신고 일원화 등

□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

- 행정규칙 사전컨설팅
 - 부처에서 입안 중인 행정규칙의 전체 조문체계 및 내용을 발령 전에 미리 컨설팅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행정규칙의 적법성·합리성 제고
 - 매 분기 부처별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시기에 맞춰 컨설팅 추진
- 행정규칙 사후 정비
 - 권리제한·의무부과와 관련되는 규정 등 국민이 정비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집중 발굴·정비
-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 대안제시
 -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와 소관부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행정규칙의 사전검토 시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넘어 대안 마련까지 적극 지원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소관부처·국무조정실(규제개혁위원회)에 수정대안을 통보, 발령·시행까지 지속 모니터링 및 지원

- 행정규칙의 적법성·타당성 제고를 위한 소통 확대
 -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규칙 정비 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국민으로부터 정비 필요사항이나 법리적 문제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규칙 정비의 내실화 도모 및 국민 중심의 법제 구축
 - 부처별 행정규칙 정비현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규칙 정비 애로 사항 청취, 대안마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로 협업체계 강화
- 행정규칙 입안 관련 상담·교육 및 홍보 강화
 - 『행정규칙 입안·심사기준』의 발간·배포, 행정규칙 입안 관련 상담·교육 등을 통해 일선 공무원의 행정규칙 입안역량 강화 지원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입안이 필요한 행정규칙이나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행정규칙에 대한 인식수준 및 이해도 제고
-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규칙 관리 강화
 - 행정규칙 등재현황의 점검 및 관리, 비공개 행정규칙의 현행화 및 공개 전환 독려 등 관리 강화로 국민의 알권리 제고 및 투명한 행정 구현에 기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점증
 - 특히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청년, 소상공인·중소기업자 등 사업자 관련 법령의 정비 필요성 증대

- 기회의 불평등 또는 불공정을 야기하거나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개선 요구 증가
- 행정규칙 개선과제 중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증가로 행정규칙 정비 소요기간 증가
 - 전체 행정규칙 미정비 과제 중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37%*
 - * '17년 ~ '23년 미정비과제(167건) 중 상위법령 정비과제는 62건임(37%).
 - 상위법령의 개정은 입법절차가 길고, 특히 법률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전문성·경험을 활용해 입법 절차를 일괄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행정규칙 규제 사전검토·사후심사 등 행정규칙 개선, 관리 관련 전문 지식 다수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 부처에 비해 법제처의 실무 및 현장 정보 부족, 개정 이행력 확보 수단 부재 • 소관부처에서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 정비에 소극적인 경우 법제처가 개정을 강제할 수단 부재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 회복 및 불공정·불합리한 법령 정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위법·부당한 행정규칙의 정비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결정 권한이 있는 각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및 법제처 간 협의 과정의 어려움 • 상위 법령 개정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규칙 소관부처가 정비에 소극적일 우려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갈등요인

- 소관부처가 법령정비에 업무 부담 등으로 소극적 입장을 취해 정비에 비협조적인 경우 발굴과제 확정에 어려움 발생
- 행정규칙 정비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의 경우 소관부처에서 개선의견 수용 및 행정규칙 정비에 소극적일 가능성 존재

□ 갈등관리계획

- 법령 정비과제 선정 시 관계 전문가 및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비과제 발굴을 다각적으로 추진
 - 면밀한 분석과 체계적 법령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법제업무평가 시 정비실적을 포함하여 소관부처의 적극적 참여 및 정책 입안을 유도
- 행정규칙 정비현황 점검회의 실시 및 필요 시 입안까지 지원
 - 미정비 개선과제를 다수 보유한 부처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실시하여 적기정비를 독려하는 한편,
 - 부처 정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행정규칙 정비를 위해 상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입안 적극 지원
 - 행정규칙의 개정만으로도 정비가 가능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행정규칙 개정 대안 마련 지원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미래기술 확산을 위한 법제 개선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법령정비) 급속한 기술 발전에 따라 대두되는 신기술·신산업의 안착을 위하여 불합리 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 협업)
-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지원) 데이터 칸막이 제거를 통해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고, 전자 문서 활용 확대를 통해 종이 없는 행정 구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
- (자동적 처분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분야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적 처분 도입 시의 법적 지침이 되는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기업 영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

- 창업 및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등에 내재된 규제 개선

-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영업기준 중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소유 이외에 임차나 공유 등도 허용되도록 규정 명확화

정비과제 예시

▶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설비 기준 완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부)

현행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등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개선	장비를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 또는 공유를 통해 구비하는 경우에도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령 정비

- (보수교육 부담 완화) △ 보수교육의 주기·횟수·시간 완화
△ 교육이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완화 등 영업자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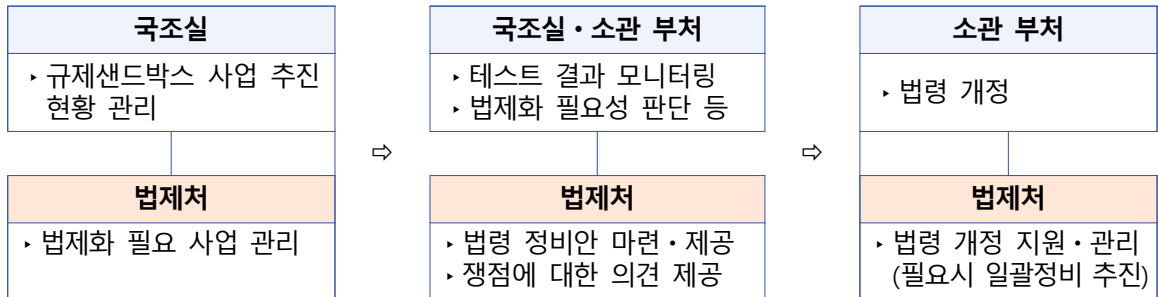
정비과제 예시 및 입법례

분야	내용
보수교육 주기 등 합리적 완화	<p>▶ 일반경비원 직무교육 주기 완화 (경비업법 시행령, 경찰청)</p> <p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행</p> 경비업자는 소속 일반경비원에게 매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2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p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2px;">개선</p> 매월 → 분기별
	<p>▶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업무 교육 횟수 감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p> <p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행</p>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책임자 및 전담인력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연 4회 이상 받아야 함
개선	연 4회 이상 → 연 2회 이상 ※ 영화·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경우 연 2회 이상
교육이수의무 위반자 제재처분 감경	<p>▶ 축산업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한 연장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p> <p style="border: 1px solid green; padding: 2px;">입법례</p> 축산업자는 1년마다, 가축사육업자 또는 가축거래상인은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질병·휴업 등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 연장을 허용
	<p>▶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이수의무 최초 위반 시 과태료 감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p> <p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현행</p>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60만원 부과
개선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또는 과태료 부과상한액 감경 * (예시) 1차 30만원(또는 경고, 시정명령), 2차 60만원

-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과제 발굴·개선

□ 미래시대를 대비한 법제개선

- 신기술·신산업 도입 촉진 및 기술발전 저해 규제 발굴·개선
 - (신기술·신산업 법제화 지원) 법제처·국조실·소관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규제특례의 유효기간(2+2년)이 도래한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 지원



- 규제개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년 2월 이후 규제 샌드박스 1,133건이 승인되어, 추후 신기술 활용 서비스·제품의 법제화 수요 지속 발생 예상
- 23. 10. 기준 개선 완료 과제 217건(19%)[법령개정(고시 포함) 161건, 유권해석 56건]
- 법률 정비 지연 등으로 테스트가 완료된 신기술의 법제화 부진 사례 발생

*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ICT융합 샌드박스, 실증특례)

- (내용) 버스·화물차의 구조를 변경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찾아가는 VR 체험서비스(지방자치단체·학교·축제 등) 제공
- (규제) '이동형 VR 트럭·버스'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규정 부재, 안전성 검사의 기준 부재(「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또는 신규법령 제정 필요)
- (쟁점) 사업자가 법령정비를 요청했으나, 규제부처(문체부)의 반대로 사업종료 예정
 - ▶(문체부) 해당 과제는 '게임제공업'(「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나 '기타유원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수 없고 관리주체가 모호함

☞ 법제화 지원을 통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법제지원 필요

- (기술규제 방식 전환) 현행 법령 상 기술기준 중 사양(仕様)방식*을 성능(性能)방식** 으로 전환 가능한 과제를 조사·발굴하여 정비

* 재료, 설비, 부품 등의 규격·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

** 정해진 사양과 동일한 기능·기술수준 등을 갖춘 경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

○ 데이터 공유 활성화

- 각 부처, 공공기관 등이 보유 중인 정보를 필요 기관과 공유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칸막이 제거를 위한 법령정비 추진

○ 종이 없는 행정 구현

- 법령에서 행정기관에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 제출 시 그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개정(20.6)되었으나, * 제4조(전자문서의 효력) ①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 개별법령에서는 여전히 원본을 요구하고 있어 종이문서를 생성·제출·보관해야 함에 따라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 사례 발생

< 전자문서 이용 실태조사(2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

◆ 기관/거래처/관공서에서 서면 원본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56.3%)

- 전자문서법 이외 법률 등으로 인해 제한 또는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한 사례 중, ① ‘기관/거래처/관공서에서 원본을 요구한다’고 응답한 사례가 56.3%, ② ‘서류를 법원에 제출, 소송,판결 등의 과정에서 자필 혹은 실물 서류가 필요하다’ 25.0%, ③ ‘감사 시 종이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6.3%

☞ 행정효율화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본 요구 개별법령의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법령 정비 필요

○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 마련

- 행정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적 처분의 도입촉진 위한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마련·전파
- * 자동적 처분 도입 가능 분야, 자동적 처분 도입을 위한 개별 법령 제정·개정 시 검토 필요사항, 외국의 도입사례 등 포함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고물가,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영업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
 - 특히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법령의 개선 필요성 증대
- 발굴된 과제가 실제 개선되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선 필요성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적 수용과 협조 필요
-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개선은 국무조정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주도하나, 그에 따른 법령 제·개정에는 소관 부처가 개별적으로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정비 및 개별정비에 대한 축적된 정비 경험 및 법제 전문성 보유 • 법제개선 과제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에서 법제개선에 소극적인 경우 독려할 수 있는 수단 부족 • 소관부처에 비해 정책 현장에 대한 정보 부족 • 신기술·신산업 관련 기술발전 추이의 능동적 확인이 곤란하여 관련 규제의 적극적인 발굴에 애로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기업의 개선 수요 •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선제적 법령 정비에 대한 정부의지 및 기업요청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영업 관련 법제개선에 대해 기존 혜택 집단의 반발 가능성 • 규제 완화의 기준 및 효과성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 • 소관 부처의 규제혁신 의지의 정도에 따라 법령정비 추진이 부진하게 될 우려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갈등요인

- 소관부처가 법령정비에 소극적 입장을 취할 경우 발굴 과제를 확정하여 정비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 발생
- 과제 발굴 과정에서 업종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이견 발생 가능
-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한 법령정비를 위해서는 기술 관련 정보 및 관련 규제의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보 부족

□ 갈등관리계획

- 개별 법령 소관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및 대안제시를 통해 법제개선 의 수용도 제고
- 과제 선정 단계부터 관계 전문가 및 업종별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법제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굴
- 연구용역 실시, 일선 산업기술 현장 및 관련 협회, 전문가, 각 부처 및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규제혁신 방향 설정
- 법제처가 입법절차 및 일정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일괄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정비 완료
- 정비추진 분야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비대상을 설정하고,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판단 및 정책 입안을 유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 법령안 심사과정에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입법의 민주성 및 신뢰성 제고
- 입법예고, 언론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관심법령을 선정,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법령심사에 국민 참여기회 보장

□ 신속·정확한 법령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쟁점이 간단하거나 문언이 명백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법령 소관 부처 의견이 없어도 법령검토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법령검토지원의 신속성 제고
 - *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은 법령검토지원 접수 후 법제처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도 제고 및 지방역량 강화 지원

□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중심의 원활한 법집행 지원

- 법령해석을 요청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요청내용을 법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완해 법령해석서비스 이용편의 제고
 - 법령 소관 부처에 법령해석에 대한 명확한 의견 요청으로 법리적 쟁점 명확화
-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기회 확대
 - 국민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령해석서비스 제공
 - * 위원회 현장 참석 외에도 사전 서면 제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참여 기회 확대

- 법령해석 시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의견청취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방문 등 의견청취 방법도 다양화
- 적극해석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 지원
 -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해석을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현장 및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법령심사

- (대상법령)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소관 법제관실에서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령안*을 대상으로 선정
 - * 국민생활과 밀접한 법령,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령, 법령심사와 관련하여 집행현장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 (국민관심법령 심사권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법령의 심사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입법예고,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국민관심법령 선정, 국민참여심사 실시 권고
 - * 최근 3개월 입법예고안 중 조회수 7천회 이상의 법령안을 매주 선정·권고
- (참여자) 법령안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민법제관 또는 심사안과 관련한 현장경험과 실무지식 등을 갖춘 일반국민
- (운영방식 및 절차) 법령안의 성격, 참여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대면심사, 서면심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
- (심사결과 피드백) 국민참여심사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에 대해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참여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 신속·정확한 법령검토로 현장 고충 해결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쟁점이 간단하거나 문언이 명백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법령 소관 부처 의견이 없어도 법령검토지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 법령검토지원 만족도 설문조사, 자치법제 역량발전회의 등을 통해 건의.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은 법령검토지원 접수 후 법제처에서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령검토지원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도 제고

□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현장 갈등 해결

- 국민의 법령해석 요청 시 적극적인 소통 추진
 -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법령해석을 요청한 내용을 법적 검토가 가능한 질의로 재구성해 법령해석 적극 실시
 - 법령해석 요청사항의 법적 쟁점을 추가·보완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편의 제고
 - * '23년 민원인 요청 210건에 대해 질의요지 보완 후 회신
- 국민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
 -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민원인의 의견 청취 기회 확대
 - 민원인이 생업 수행 또는 거리 등의 이유로 위원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사전 서면 제출 등 의견제출 기회 다양화
 - * '22년 38건, '23년 47건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적극해석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 지원
 -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는 적극해석('24년 60건 목표)을 통해 경제활성화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정책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국민과의 소통 필요성 증대
-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검토 의견을 요청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정과제의 적극적 이행, 특히 규제확대 방지를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뒷받침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부터 국민법제관을 운영하여 분야별 인력 네트워크 등 제도적 기반 구축 •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신속·정확한 검토의견 제시 • 정부입법 총괄기관으로서 법적 전문성 보유 및 법령해석 관련 자료 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과 전문가 사이의 법령에 대한 이해의 차이 • 법령검토지원은 신청기관의 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 가능 • 법령해석 요청의 증가에 비해 내부 인력 등 법령해석 요청 처리능력의 한계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 참여 욕구 증대 • 신속·정확한 법적 검토를 받고자 하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수요 증가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로 법령상 이견이 있는 상황에 대해 법령해석 제도를 통한 해결 추진 시도 증가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령심사의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 제도 간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령해석, 법령입안지원 대상임에도 법령검토지원을 요청 • 법령해석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부족 • 법령 소관 부처의 협조(1차적 법령해석 등) 부족

□ 갈등요인

- 국민참여심사 진행 시 법령안의 직접 이해관계자가 관련 분야 전문가가 법령심사에 참여할 가능성

- 법령해석·법령입안지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검토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는 수요 증가
- 국민들이 법령해석 제도를 권리구제수단 등으로 보는 인식 확대, 관련 법령해석 요청 증가로 모든 법령해석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

□ 갈등관리계획

- 법령심사의 공정성,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전문성, 객관성, 중립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참여국민을 선정
- 중앙·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검토지원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법제지원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제도별 취지 및 이용방법에 대한 종합적·적극적 홍보 실시
- 국민의 단순민원·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해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쟁점 정리 및 검토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기 본 방 향

◇ 전략목표의 주요내용

-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반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 등으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법령정보를 활용한 리걸테크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생활주제에 관한 법령정보를 통합·재가공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정보 콘텐츠를 제공
-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 확산
 - 법령 및 표준 약관·계약서·설명서 속 어려운 용어·문장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법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법치주의 확산에 기여
 - 법제교육 수요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 우리 법제정보·법제발전경험 및 세계 법제정보의 국내외 제공
 - 한국 친화적 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우수한 법령정보 인프라 및 법제 발전 경험 공유

◇ 전략목표와 임무의 관계

- 국민이 편리하게 법령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법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시대를 뒷받침
- 복잡화·다양화 되는 법령체계 및 국민 수요에 대응하여 법령정보를 해설·가공하여 제공하고, 카드뉴스나 솔로몬의 재판 등 참여형 콘텐츠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일반 국민은 법령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청년 세대는 유튜브 등 시각 정보에 익숙한 상황에서, 각종 법령정보를 국민이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필요

(1) 주요내용**□ 법령정보 서비스 혁신**

-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으로 일반국민·기업의 법령검색 편의성을 높이고 법령 공공데이터 활용 증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을 통해 일반 이용자 및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소외계층의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통합·제공, 이를 기계판독이 용이한 형태로 개방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이슈에 관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해설·제공, 국민과 정부 간 법령정보 비대칭 해소 및 국민 편의 증진
-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민 등의 생활 안정과 조기 적응을 지원하고,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생활법령정보를 외국어 콘텐츠로 번역·제공

□ 국민의 법 접근성 제고 및 법치주의 확산

- 현행 법령 및 표준 약관·표준 계약서·표준 설명서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 정비 추진, 국민 중심의 법제 기반 구축
- 어려운 법령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절차도·표 등 시각 콘텐츠로 제공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 및 접근성 제고
- 법제교육 수요자의 요청을 반영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 공무원 등의 법제역량과 문제해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 강화

□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여 국민·기업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정책 수립 뒷받침
- 외국법제기관과의 법제교류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성장을 뒷받침한 우리 법제 발전 경험·정보를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
-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ODA 사업을 통해 해외 국가의 법령정보를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8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만족도	88.5	88.5	88.6	88.7	88.8	89.4	최근 5년('19~'23년) 간 실적치 증가 추세, 목표 대비 실적달성도와 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의 지속 증가 곤란 등을 고려하여 '23년도 실적치 대비 0.6%p증가한 89.4점으로 설정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자수 * 가중치) 합 / 평균 / 전체 응답자 수 -문항내용 ①업데이트의 신속성 ②검색의 신속성 ③법령정보의 신뢰성 ④검색의 안정성 ⑤법령정보 활용성 ⑥전체적인 만족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상시 만족도 조사 수행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2	'23	'24	'25	'26
Ⅲ-1. 법령정보 서비스를 혁신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일 이용자 페이지 뷰 수	1,750만	1,920만	1,950만	2,020만건	2,040만건
- 생활법령정보시스템 연간 일일 평균 방문자 수	105,608	113,319	122,000	135,000	150,000
Ⅲ-2.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치주의를 확산한다.					
- 법제교육 후 업무활용도	91.3점	91.9점	92.0점	92.0점	92.0점
Ⅲ-3.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교류·협력을 강화한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와 연계·협업 기관 수	-	-	11	13	15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제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개선 요구 증가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요구 증대
- K콘텐츠, K화장품 등 K상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로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 기관으로서 법령 속 알기 쉬운 용어·문장 정비의 주도적인 추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등 정보취약 계층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는 데 어려움 • 법령 속 전문 용어 정비 시 특정 분야별 전문가의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움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페이지뷰 등 국가 법령정보 이용의 지속적 증가 •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22대 국회 구성 이후 법안 제출건수 증가 및 법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에 관한 국회 등 유관기관의 관심 증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양과 복잡성 증대로 일반국민의 법령정보 검색 어려움이 가중 •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기술 활용 시급 • 어려운 법령용어·문장 정비안에 대한 기존 전문가 집단 및 법령 소관 부처의 소극적 대응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갈등요인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각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검색 및 관리에 어려움

-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된 생활법령정보 부족
- 전문 분야 법령 용어·문장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우려
- 많은 비용이 드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수출 또는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에 한계

□ 갈등관리계획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통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이를 오픈 API로 개방
- 법령의 내용을 그림으로 해설한 카드뉴스형 콘텐츠의 서비스 언어를 영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 국민, 소관 부처, 전문가 및 업계 등 정책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하여 실효성 있는 정비안 마련
- 산업별 소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수요 집중 발굴

(4) 기타

- 법제교육시스템(<https://edu.moleg.go.kr>)
 - * 연간교육계획 및 정보, 수강신청, 설문조사, 수료증 출력 등 모든 행정업무 가능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www.easylaw.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orld.moleg.go.kr>

(1) 주요 내용

□ 법령데이터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이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으로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지능형 검색 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SNS 공유 간소화 등의 기능 개선을 통해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법령소외계층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통합·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령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중점 개발
 - 다양한 유형의 생활법령정보 콘텐츠(책자형, 이미지 중심의 카드 뉴스형, 100문100답 등) 제작, 포털사이트(지식iN)에 연계·제공하여 활용도 제고
-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제공
 - 긴급복지지원, 반려동물등록, 지역사랑상품권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정보를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생활법령 콘텐츠 번역·제공
- 동일한 주제의 콘텐츠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서술형, 카드뉴스형, 100문100답형 등 콘텐츠 유형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검색의 편의성 제고

(2) 세부 추진계획

□ 법령데이터혁신을 통한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법령검색 지능화 및 이용 활성화
 - 사용자 질의에서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는 인공지능 모듈을 개발하고 QnA 학습데이터를 수집하여 반복학습 수행
 - ※ 법령정보별 가중치 부여, 동의어 확장 등을 통한 검색결과 품질 향상

■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예상도 ■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interface with a search bar containing the text "모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Below the search bar, there are three search results for the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Special Act on Prevention and Compensation of Financial Damage from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results are:

-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의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자주 찾는 질문(FAQ) 500개를 선별하여 해당되는 정확한 법조문 (답변을 미리 설정)을 연결시켜 이용자의 검색 편의성 제고
- ※ 검색창에 질문 일부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을 통해 FAQ의 질의-답변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

- 지능형 법령검색 대상 및 공동활용 체계 확대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한 사항이 담긴 행정규칙이나 별표·서식에 대한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범위 확대 제공
 - 법령 데이터간의 상호 연관성을 이용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자들이나 일반 국민도 쉽게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 현재 제공 중인 오픈API 방식에서 추가하여 LOD 기반의 법령데이터 제공 신규 개발
-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일상용어나 문장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법령조문을 바로 찾아주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생성형 서비스로 전환
 - 관련된 법조문, 입법배경 및 취지, 판례·해석례 등을 수집·요약하여 사용자가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 의견 수렴 및 기능 개선 추진
 -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으로 법령정보 활용에 있어 편의성 제고
 - *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한 상시 의견 수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행('24.7.)
 - ** 법령정보 SNS 공유, 별지서식과 정부24 신청 페이지 간 연결 기능 구축('24.3.)
 -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 대상으로 법령검색 불편 사항 의견 수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 * 시각장애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사항 설문 조사('24.3.) 및 현장간담회('24.4.), 고령층 대상 현장간담회('24.10.)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통합 개방
 - 민간이나 기관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친화적인 형태(openAPI)로 개방

□ 생활법령·조례 서비스를 통한 생활밀착형 법령정보 제공

- 국민 관심도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한 생활법령 콘텐츠 제공(70건 신규 개발)
 -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수요 중심의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중점 개발
 - * 소상공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지역상권 살리기, 등
 -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새롭게 필요한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
 - *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상·하반기) 및 세미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동물복지, 공연장 안전관리, 생활방사선 안전 등 신규 개발 콘텐츠 주제 선정
-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정보 콘텐츠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작·제공(2,100건)
 - 긴급복지지원, 반려동물등록, 지역사랑상품권 등 생활 밀착형 조례 정보를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확대(72건 신규 번역 제공)
 - 국내 거주 외국인·이주민의 한국생활 적용에 필요한 생활법령 콘텐츠* 번역·제공
 - * 서비스 이용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 교육, 행정 심판·소송, 소비자 안전정보, 인터넷 쇼핑 등 외국어 콘텐츠 주제 선정
 - 법령의 내용을 그림으로 해설한 카드뉴스형 콘텐츠의 서비스 언어를 영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
 -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니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연계 등 홍보 활동 강화
- 생활법령 이용·이해 촉진을 위한 콘텐츠 유형 다양화
 -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여형·사례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웹툰 등 다양한 읽을거리 제공
 - * 솔로몬의 재판(참여형), 100문100답(사례형), 웹툰 등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
 - 콘텐츠 간 연계 강화, 메인화면 개편 등을 통해 이용자의 검색 편의 개선
 - * 동일한 주제의 콘텐츠(서술형, 카드뉴스형, 100문100답) 간 연계를 강화하여 주제별 관련 콘텐츠를 한꺼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정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제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능 개선 요구 증가
 - * 법령정보 제공량: ('21년)455만 → ('22년)486만 → ('23년)513만
- 시각장애인, 고령자 등 법령정보 소외계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선 필요성 증대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가 각 부처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검색 및 관리에 어려움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이용자 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생활주제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및 검색 기능 개선 등 요구 증가
 -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일평균 방문자 수 ('21) 7.1만명 → ('22) 10.6만명 → ('23) 11.3만명
- 국내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수요 증대 예상
 - * 국내체류 외국인 현황: ('22) 2,245,912명 → ('23) '2,507,584명(+11.7%)
 - * “외국인근로자 역대 최대 도입, 상생방안 지속 강구해야”(2023.11.28., 연합뉴스)
-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외국인유학생 등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된 생활법령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 • 법령정보의 단순 취합·제공이 아닌 법령을 생활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번역하여 제공 • 여러 소관부처로 얽힌 법령정보를 한 개의 콘텐츠로 가공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저시력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하는 데 어려움 • 현재 생활법령정보시스템의 기술적 제약으로 제공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의 한계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p style="text-align: center;">Opportunity(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페이지뷰 등 국가법령정보 이용의 지속적 증가 • 국민 권리의식 신장 및 민원업무의 직접 수행 증가에 따라 허가·신고 등의 근거가 되는 생활법령에 대한 수요 증가 • 법령체계의 복잡·다변화로 쉬운 법령정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 증가 •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이주민이 실생활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번역된 생활법령정보의 확대 제공 요구 • 국가 간 교류 증가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국어 생활법령 콘텐츠 수요 지속 증가 예상 	<p style="text-align: center;">Threat(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의 양과 복잡성 증대로 일반국민의 법령정보 검색 어려움이 가중 • 민간의 발전된 AI 기술 수준에 맞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신기술 활용 시급 • 법령의 양과 복잡성 증대로 일반국민의 법령정보 검색 어려움이 가중 • 챗봇 등 AI 서비스 보편화에 따라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 일방향적인 단순 콘텐츠 제공 방식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발생

□ 갈등관리계획

- 법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협력 체제 유지 및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법령 공공데이터 발굴·개방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청취, 법령정보 소외계층 대상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
-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통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이를 오픈 API로 개방
- 국민 관심도 및 사회변화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생활주제 관련 법령정보 콘텐츠 개발·제공

- 법령의 내용을 그림으로 해설한 카드뉴스형 콘텐츠의 서비스 언어를 영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법령정보 접근성 제고

*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인니어, 몽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 생활법령정보 콘텐츠 간 연계 강화로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증진
 - 동일한 주제의 유사 콘텐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간 연계 서비스 강화

(4) 기타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http://www.easylaw.go.kr>

(1) 주요 내용

-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현행 법령 및 표준 약관·표준 계약서·표준 설명서 속 어려운 법령 용어와 복잡한 문장 발굴·정비
 - 국민 일상생활과의 관련성,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비 필요성이 높은 법령 및 표준약관 등을 집중 정비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조문에 그림·사진·표 등의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 대국민 설문조사, 법령 누적검색 순위 등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법령정보 시각 콘텐츠 개발·제공
- 법제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교육 실시
 -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례 중심의 내실 있는 법제교육 제공
 - 교육대상 기관 및 수강생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 대상 자치법제 교육 강화
 - * 지방의회 의원 및 정책지원관 과정 확대·강화
 - 헌법·민법·행정기본법 등 기본법령 교육, 건축법령·민원처리법 등 주요 행정법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규제법령 정비 등 국정현안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제교육 실시

□ 법제교육시설 개원 대비 교육과정 내실화

- 중장기 교육과정 신설·확대 및 공무원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 사례·실무 중심 교육 강화 추진
- 공공기관 직원 대상 내규입안·정비 종합과정 등 교육대상자별로 특화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및 시각화를 통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읽기 쉬운 법령 문장 만들기
 - 국민 생활 관련성이 높은 재산·가족관계 및 경제·금융 분야 법령 속 읽기 어려운 법령 문장 발굴 및 정비안 마련*
 - * 국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교차검토를 통해 조문 정비과정에서 의미 변동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과제 관리 추진
- 표준약관·표준계약서·표준설명서 정비
 - 어려운 용어·문장 등이 포함된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표준설명서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대국민 파급효과, 관련 업계의 개정 요구사항 등 정비 필요성이 큰 표준 약관·표준계약서·설명서 등 선별, 정비안 마련 추진
 - 소관 부처,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정책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실효성 있는 표준약관 정비안 마련
- 어려운 용어 사전차단 및 심사안 검토
 - 부처협의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이 법령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용어·문장 정비안 제공 등 부처 협의 추진
 - 법령 및 조례의 제정·전부개정안 심사 시 어려운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을 발굴하여 정비안 마련, 법령 심사 반영

○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 국민 수요* 기반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주요 법령 대상 시각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추진(약 480건 목표)

* '23년 11월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1,466명) 설문 결과 및 법령별 누적검색순위 참조

- 콘텐츠 개발 시 일반 국민, 법령별 전문가, 법령 소관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하여 콘텐츠 완성도 제고
- '21년 및 '23년 개발한 기존 콘텐츠 중 보완이 필요한 콘텐츠 선정 (98건) 및 개선 추진, 콘텐츠 품질관리 강화

□ 공무원 법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공무원의 법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헌법·민법·행정기본법 등 기본법령 교육, 건축법령·민원처리법 등 주요 행정법령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실시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증진을 위하여 「행정기본법」 교육과정 운영 지속

○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법제 교육 강화

- 지방자치단체 교육 수요에 맞추어 상·하반기 순회 법제교육 또는 개별 기관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 지방의회 의원 법제연수과정 및 정책지원관 과정 확대·강화

○ 법제교육시설 개원에 대비한 장기교육과정 확대·다양화

- (기관연계과정) 각 교육기관별 특징 및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 과목·방식 등을 구성하여 각 기관의 연간 교육계획에 1~2주 과정의 법제교육과정을 추가, 해당 교육과정 직접 운영

- (행정법 과정) 사례와 연계된 행정법 이론 중심의 5일 종합과정인
행정법실무 종합과정 확대 운영

○ 법제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법제전산 교육 내실화

- 법제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제교육시스템의 고도화 추진

- 이론 강독·시연 중심 법제전산교육*을 실습 중심 교육으로 전환

* 법령안편집기 활용, 법령정보 검색 및 관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하고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대한 국민의 정책적 요구 증대

- 법규 수범자인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 필요

○ '06년부터 추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은 법령을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 필요

* 국민 인식조사 결과('22년 2월/1,230명 대상), 79.7%가 법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불명확한 문장 45.6%, 복잡한 조문 체계 48.5%라고 응답

- 청년 세대는 시각적 정보에 익숙한 점을 고려하여 법령정보를
시각 콘텐츠로 보여주는 법령정보 서비스 지속 제공 필요

○ 행정기관 근무 변호사, 지방의회 의원·정책전문관, 공공기관
직원 등 교육 수요의 다양화 및 전문화

- 법제처는 정부입법 총괄 기관으로서 법령 속 알기 쉬운 용어·문장 정비의 주도적인 추진 가능
- '06년부터 추진해온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노하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 자료 축적
- 팀 내부에 국어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알법 검토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가능
- 정부 부처의 법령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Strength(강점)

- 법령 속 전문 용어 정비 시 특정 분야별 전문가의 자체적인 확보가 어려움
- 법령 제·개정 시 시각 콘텐츠 내용 및 디자인의 신속한 수정 필요
- 전문적이고 복잡한 조문 체계의 경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기 어려움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 알기 쉬운 법령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청년 세대는 어려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고 짧은 글과 시각 자료 선호
- 22대 국회 구성 이후 법안 제출건수 증가 및 법안 속 어려운 용어·문장 정비에 관한 국회 등 유관기관의 관심 증대 예상

Threat(위협)

- 어려운 법령용어·문장 정비안에 대한 기존 전문가 집단 및 법령 소관 부처의 소극적 대응
- 민간에서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법령 정보와의 차별성 확보 필요

□ 갈등요인

- 전문 분야 법령 용어·문장 정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우려
 - 특히, 전문용어 등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소관 부처나 관련 전문가 집단이 정비에 부정적일 소지
- 전문적이고 복잡한 조문 체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그림으로 개발하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한눈법령 시각 콘텐츠 보완 등 지속적 콘텐츠 품질 관리가 어려움
- 법제교육 인력 및 물적 기반 부족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 곤란

□ 갈등관리계획

- 국민, 소관 부처, 전문가 및 업계 등 정책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하여 실효성 있는 정비안 마련

- 파급효과가 큰 표준계약서 등은 정비안 통보 후 의견 조회가 아닌, 정비초안 작성 단계부터 현장의견 수렴 추진

< 의견수렴 등 추진 절차 >

연구 용역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등 정비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				정비안 반영
	법제처	관계 부처	관계 기관	업계 종사자	
실태조사 및 발굴	정비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	정비안 감수	소비자 영향 검토	현장 의견제시	부처 협의

- 법령 소관 부처 및 분야별 전문가 감수를 통해 콘텐츠의 완성도 제고, 대국민 콘텐츠 만족도 조사 등 환류 실시
- 한눈 콘텐츠 표준안 개발, 기존 콘텐츠 보완·개선 및 월별 법령 제·개정 사항 점검 강화 등으로 시각 콘텐츠 신뢰성 확보
- 급증하는 법제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제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양질의 교육인력과 교육 시설이 확보된 법제교육시설 개원 추진

* 착공('21년 12월) → 준공('24년 9월) → 개원('24년 10월) 예정

(4) 기타

- 법제교육시스템(<https://edu.moleg.go.kr>)
 - * 연간교육계획 및 정보, 수강신청, 설문조사, 수료증 출력 등 모든 행정업무 가능

(1) 주요 내용

□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 정보 제공

- 수출유망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3년 K콘텐츠 법령 정보 제공 협업 모델을 K화장품, K의료 등으로 확산
- 법제·언어 전문가로 외부 자문단을 구성하고, 내부 감수(연구원 상호 간) 후 외부 감수(자문단)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감수 실시

□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 아시아 지역 내 법제기구와의 다자간 교류 강화를 위한 '아시아 법제기관 협의체' 설립 추진
- 아시아 지역 민·관·학 전문가들과 법제 현안을 논의하는 '제 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인도네시아 법제 담당 공무원 대상 법제역량강화 지원(ODA, KOICA, '23~'24년),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제 정보·경험 전수
- K-법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맞추어 외국기관 등이 우리 법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적시 제공, 기존 번역본에 대한 감수를 통해 번역 품질 제고
- 아세안 국가에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법제 발전경험과 IT 기술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공유·전파

(2) 세부 추진계획

□ 수출기업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제공

- 산업별로 소관기관이 수출기업의 수요를 파악하면 그에 맞는 법령정보(법령 번역본 및 진출단계별 규제정보)를 생산·공유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협업 결과물을 게시함으로써 수출기업이 필요한 각 분야의 필수적인 법령정보를 망라하여 원스톱 제공
- 연구인력 증원, 상호 내부 감수 언어권 확대 등으로 해외 법령 정보 서비스 확대
 - 법률·언어 전문가를 통한 외부감수 대상 또한 기업의 수출 수요가 많은 특수 언어권 국가의 법령 번역본으로 확대
- 해외법령 원문·번역본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 센터 편의성 제고
 - PDF파일로 제공중인 해외 법령정보 1만6천건을 텍스트 데이터로 전환하는 DB 구축 사업 추진

□ K법제 전파를 위한 법제교류 협력 강화

-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역내 중추적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아시아 법제기관 협의체' 설립 추진
-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현황을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제12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24년 하반기)
- 인도네시아 법제 담당 공무원들을 초청,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K-법제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ODA) 지원('23~'24년, KOICA)

- K-법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맞추어 외국기관 등이 우리 법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의 외국어 번역본 적시 제공, 기존 번역본에 대한 감수를 통해 번역 품질 제고
- 아세안 국가에 법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한국의 우수한 법제 발전경험과 IT 기술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공유·전파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PEST 분석을 통한 환경 분석 및 대응방향 도출 >

구분	위험요인	기회요인	대응방향
Political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의 자국 우선 정책 기조 강화 • 미·중 디커플링, 지역별 전쟁 등으로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지위 부여 등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무역·교류 대상 국가와 지역을 신흥국, 중동 등으로 다변화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제3 세계 국가들과의 “다자 교류 협력 체계” 구축 추진 • 마인어, 아랍어 등 특수 언어권 국가의 법령정보 제공 확대
Economic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 되는 상황에서 높은 중국 의존도 유지 • 중국 경제악화 등 세계적 경기둔화로 수출 중심의 민생 경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교류 확대 • K콘텐츠, K화장품, K의료 등 K상품의 세계적 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법제를 적극 전파”함으로써 한국 친화적 법제 환경 조성, 국내 기업·국민의 해외 진출 지원 • K상품 분야별 맞춤형 해외 법령정보 제공
Social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사회·문화·법제도의 다양성으로 인한 협력 한계 • 영세·중소기업은 수출·해외진출에 필요한 고액의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한국의 법제 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정부·기관의 수요에 맞춘 “K-법제정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친한국적 법제환경 조성에 기여 • 산업별 소관부처를 매개로 중소기업 수요를 파악하여 해외 법령정보 제공
Technology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국가별 IT 인프라 격차 확대 •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빠른 발전에 대비하여 관련 법·제도 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의 우수한 법제 IT 역량에 대한 타 국가들의 관심 증대 • 기계학습 등 발전된 정보화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 법령정보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정보시스템 등 “법제 IT 분야 역량강화 지원” • 미래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 모색 • 정확한 법령용어 없이도 해외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세계법제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 외부환경

- K콘텐츠, K화장품 등 K상품에 대한 세계적 관심 증가로 국민과 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수요 증가
- 한류 확산 등에 따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K-법제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법제교류협력 수요 증가

□ 갈등요인

- 많은 비용이 드는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은 수출 또는 해외진출 시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에 한계
- 법제교류 협력이 국가별로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법제 현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안정적·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

□ 갈등관리계획

- 산업별 소관부처와 협업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수요 집중 발굴
- 주요 협력국들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공동 협력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계 설립 필요성을 설득, 공감대 형성 추진

(4) 기타

-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orld.moleg.go.kr>
- KOICA ODA 사업을 통한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mlis.gov.mm>